

석사학위논문

직업군인의 주거복지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2014년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국방경영학과

경영학전공

최동기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김선호

직업군인의 주거복지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The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occupational military
personal housing welfare and improvement suggestions

2013년 12월 14일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국방경영학과

경영학전공

최동기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김선호

직업군인의 주거복지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The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occupational military
personal housing welfare and improvement suggestions

위 논문을 경영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12월 14일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국 방 경 영 학 과

경 영 학 전 공

최 동 기

최동기의 국방경영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년 12월 14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국 문 초 록

직업군인의 주거복지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국방경영학과

국방경영학 전공

최 동 기

본 연구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국가방위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업군인들의 주거복지 실태를 분석하고, 주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여기서 직업군인의 적용 범위는 복지 혜택을 직접적으로 수여받고 느끼는 배우자 및 자녀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적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문화, 환경, 사기·복지측면에서 직업군인들의 주거복지 실태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주거복지, 주거만족도에 대한 개념적 고찰을 통해서 주거복지가 단순 복지개념을 초월한 인권이 포함된 권리의 개념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사실과, 주거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거주자의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환경적 요인과 주거의 경험요소 등 다양한 고려상황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직업군인은 임무의 특성상 면 단위 이하의 취약지역(29.5%)에서 근무하고 있고, 노후 및 협소한 시설(23.5%), 잦은 이사에 따른 인간관계의 단절, 경제적 부담, 자녀의 교육문제 등은 직업군인들의 사기에 직접적인 악영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일반인들이 군인을 직업으로서 선호하지 않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직업군인들의 주거복지에 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수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2007년 제정된 「군인복지기본법」은 군인복지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되었으며, 이를 기초로 국방부는 「군인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점진적인 개선 노력을 추진하고 있고, 그 결과 만족할만

한 수준은 아니지만 일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큰 편이다.

더구나, 최근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신형 장비의 공개, 비탄화력의 증가 등 군사적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안보 상황은 복지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의 증액을 제한시키고, 국방비를 방위력 개선 위주로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업군인들의 주거복지 지원 정책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거지원 방법 및 예산’, ‘주거환경 및 교육’, ‘주거시설의 관리’ 등 3가지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주거지원 방법 및 예산 측면에서는, 현재의 군 관사지원 정책이 직업군인들의 주택 마련에 대한 의지를 결여시키고 있고, 향후 미래인구변화 추세 및 군 관리시설의 유지관리 부담 등을 고려하여 자가 보유율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각종 비현실적인 주거복지 예산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주거환경 및 교육 측면에서는, 일반인들과 문화 및 복지 교류가 가능하도록 일반인 주거공간과 근접한 곳에 대규모의 단지를 설치하고, 직업군인의 임무, 부양가족의 수, 자녀의 성별, 신체적 변화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주거시설의 구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잦은 이사로 인해 군인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인식되는 자녀들의 교육여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군인 주거시설의 관리 측면에서는 인터넷을 활용한 주거관리 시스템의 개선과 이를 상시 확인, 감독하고 주기적으로 군인복지 실태를 분석하고 관리하는 전문 감사 인력의 확보 등을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앞에서 제시된 여러 방안들이 시행될 경우, 직업군인들에게 주택 마련의 기회 제공 및 복지 혜택을 직접 체감하게 함으로써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미래 주거확보의 불확실성 등에 대한 불안을 해소시켜 본연의 임무인 국가방위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주거복지, 직업군인, 주거만족, 주거지원, 군 관사

목 차

I. 서 론	1
1.1 연구의 목적	1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1.2.1 연구의 범위	3
1.2.2 연구의 방법	3
II. 직업군인의 주거복지 개념과 특성	5
2.1 직업군인의 복무환경과 군인 주거시설	5
2.1.1 직업군인 복무환경의 특수성	5
2.1.2 직업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9
2.1.3 군 주거시설의 이해	12
2.2 군인복지기본계획	22
2.2.1 군인복지의 개념 및 기능	22
2.2.2 군인복지기본계획의 배경과 의의	23
2.2.3 군인복지기본계획의 성과 및 추진방향	24
2.3 주거복지와 주거만족도의 이해	28
2.3.1 주거복지의 의미 및 필요성	28
2.3.2 주거만족도의 개념 및 영향요인	32
III. 직업군인 주거복지 실태 및 문제점	35
3.1 복지정책 실태 및 문제점	35
3.2 외국군의 주요 복지 정책	38

3.2.1	주요 국가별 군 복지지원 정책	38
3.2.2	외국군 복지 정책의 시사점	45
3.3	한국군 주거복지 실태 및 문제 개선 사례	48
3.3.1	문화적 측면	48
3.3.2	환경적 측면	54
3.3.3	사기 및 복지 측면	59
3.3.4	한국군 주거개선 사례	71
 IV. 직업군인 주거복지 개선방안		74
4.1	현안 문제 해결 방향	74
4.2	주거지원 방법 및 예산 측면	76
4.2.1	직업군인 자가(自家) 보유율의 증가	76
4.2.2	군(軍) 지원 주거시설의 최소화	83
4.2.3	주거지원 예산의 현실화	84
4.3	주거환경 및 교육 측면	87
4.3.1	주거시설의 대단지화	87
4.3.2	사용자 중심의 구조 개선	90
4.3.3	자녀 교육 환경 개선	91
4.4	주거시설의 관리 측면	93
4.4.1	군(軍) 관사 배정 기준 조정	93
4.4.2	군(軍) 관사 관리 시스템 개선	94
4.4.3	주거복지 만족도 진단방법 개선 및 전문 감사 인력의 확보	95
 V. 결 론		97
 참고문헌		100
 ABSTRACT		103

표 목 차

〈표 1〉 공무원의 구분	5
〈표 2〉 현역 정년	7
〈표 3〉 주요 공무원 정년 현황	7
〈표 4〉 근무지역별 비율	8
〈표 5〉 시대별 유망 인기직업 변천사	10
〈표 6〉 군 직업 기피 이유	11
〈표 7〉 군 관사의 형태별 시설 기준	14
〈표 8〉 군 관사의 평형별 입주 기준	14
〈표 9〉 일반관사 입주보증금 징수 기준	15
〈표 10〉 퇴거지연 관리비 징수 및 경과 기간별 누진징수 기준	15
〈표 11〉 주거 환경 비교	16
〈표 12〉 계급별 주택 보유율	17
〈표 13〉 관사 소요 대비 보유 현황(2010년 기준)	18
〈표 14〉 군 관사 개선 현황(2011년 10월말 기준)	19
〈표 15〉 군 관사 건립과 매입 현황	20
〈표 16〉 급지별 대부금 지원 기준	21
〈표 17〉 주택수당 제도 변천	21
〈표 18〉 제3영역(주거보장) 세부 추진과제	27
〈표 19〉 주거복지의 정의	29
〈표 20〉 적절한 주택의 구성요소	30
〈표 21〉 복지향상을 위한 우선 지원 희망사항	32
〈표 22〉 군과 사회의 주거 불만족 사항 비교	32
〈표 23〉 주거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수	34
〈표 24〉 국방예산 요구 및 검토 실태	36
〈표 25〉 국가별 GDP 분석	39
〈표 26〉 미국군과 한국군의 기본급여 비교	40

〈표 27〉 장교 기본 급여(미군)	41
〈표 28〉 기타 국가의 주요 주거분야 지원제도	45
〈표 29〉 결혼을 꺼리는 이유	49
〈표 30〉 직업군인의 자녀 수	50
〈표 31〉 국방여성 출산율	50
〈표 32〉 최초 주택수당 소요년수	51
〈표 33〉 군인 배우자의 직업	53
〈표 34〉 자가 주택 구입 희망지역	54
〈표 35〉 군 어린이집 / 유치원 현황	57
〈표 36〉 국·공립 어린이집 / 직장 어린이집 비교	58
〈표 37〉 육로수송임 지급 기준	60
〈표 38〉 이사비용	60
〈표 39〉 입주 지연 사유	61
〈표 40〉 부대 이전후 입주까지의 대기기간	62
〈표 41〉 필요 근린시설(고양, 파주, 포천)	63
〈표 42〉 부대별 입주 우선 순위	65
〈표 43〉 주택 자금 마련시 겪었던 어려움	67
〈표 44〉 은행별 가계 대출 금리(평균)	68
〈표 45〉 군인공제회 생활자금 대여 적용 금리(회원대여)	68
〈표 46〉 군 간부 전세대부 현황	69
〈표 47〉 전세자금 비교	69
〈표 48〉 전세자금 대출 금리	70
〈표 49〉 주요 시설과의 이격거리	73
〈표 50〉 문무 아파트 직장어린이집 현황	73
〈표 51〉 군 관사 개선을 위한 자원 소요('13~'17 국방중기계획)	74
〈표 52〉 가구원수별 추계가구(2035년)	75
〈표 53〉 국민주택 기준(85㎡) 적용시 입주보증금	80
〈표 54〉 '01~'03년 군 간부 전세금 대부사업 전입금 조성 현황	84
〈표 55〉 별거 원인에 의한 수당 지급 차별화 적용(안)	86

〈표 56〉 군인 주거시설(APT) 건설 사례	87
〈표 57〉 수납공간 설치(안)	90

그 립 목 차

〈그림 1〉 새로운 군인복지 8대 복지영역	26
〈그림 2〉 공무원·군인연금 재정보전액 추이	37
〈그림 3〉 한국 남녀의 평균 초혼 추이	49
〈그림 4〉 한국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49
〈그림 5〉 계급별 주택 보유율	52
〈그림 6〉 지역별 경제적 행복지수	55
〈그림 7〉 계급에 따른 근무년수와 이사횟수	59
〈그림 8〉 두미르 아파트 및 문무 아파트 전경	71
〈그림 9〉 최초 10년간 주택 전세가격 종합 지수 분석(전국)	76

I. 서 론

1.1 연구의 목적

불과 반세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오랜 시간동안의 일제 강점기와 6.25전쟁을 겪으면서 세계의 그 누구도 ‘희망’이라는 단어를 찾기 힘들 정도로 황폐화 되었던 국가였으나, 1970년대 이후 새마을운동을 근간으로 국민의 단합된 의지와 피땀 어린 노력을 통해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어 내었고, 1980년대 후반 이후 국가경제의 급속한 발전은 국민들의 ‘삶의 질(質)’ 수준을 놀라울 정도로 향상시켰으며, 이는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세계 많은 국가들에게 수범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경제성장의 뒷면에는 국가기반시설의 복구, 환경개선, 대국민 계몽운동, 기술 전수 등 제반분야에 이르는 군(軍)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으며,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는 첨예한 안보현실은 국민들의 생존에 대한 위기감을 고취시킴으로써 군에 대한 신뢰와 국력을 뭉치게 하는 기반이 되어왔다.

그러나, 급격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민들의 교육 및 의식수준이 향상되고 다양한 직업의 창출 및 생활여건의 개선은 군(軍)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식변화를 발생시켰으며, 과거 생존을 위한 1차적 욕구해결에 만족하였던 생활형태가 지금은 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여유로운 생활을 추구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 군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전력증강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민간사회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 결과 수많은 직업군인 및 군인가족들은 그동안 열악한 생활환경 속에서도 명예를 바탕으로 묵묵히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 오고 있으나, 외적으로 투영되는 직업군인의 열악한 근무여건 및 생활환경은 일반인들에게 군에 대한 기대감을 감소시켜 우수 인력의 확보를 어렵게 하는 부정적 영향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2012년 10월, 국회 국방위원회 김광진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제공받은 ‘군 숙소 현황’ 자료를 근거로 군 숙소의 노후화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역주민들은 공부 못하면 저런 아파트에 산다라고 자녀들에게 교육한다.’, ‘군인 자녀들이 지나가다가 심하게 노후화된 아파트를 보면 군인아파트라고 말할 정도다.’라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¹⁾

그나마 최근 이러한 군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곳곳에서 대두되면서, 여러 부분에서 개선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그 변화의 속도가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어 직업군인 및 가족들의 실제 체감효과는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고려할 때 근본적인 보완을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통상적으로 직업군인들은 국가에서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관사 시설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며 군 임무수행에 전념하고 있으나, 임무 및 근무지역의 특성상 전방지역 또는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잦은 이사, 노후된 시설, 문화적 혜택 제한, 교육 여건의 미비 등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며 지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일반인과는 달리 많은 직업군인들이 자가(自家) 구입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국가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군 관사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자녀교육 문제, 퇴직후 정착 등을 이유로 뒤늦게 자가 마련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지만 물가상승, 정보의 부재 등으로 주택 마련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런 현상들을 고려할 때,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전·월세 대란 현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미 주택의 가격은 은행 대출을 안지 않고서는 부담하기가 힘든 상황이고, 이로 인한 하우스푸어(house-poor)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전세 물량은 줄고 월세로 전환하는 소유주가 늘어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가격이 주택의 매매가격을 초월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주거 문제의 해결은 직업군인 및 군인가족의 불안감을 해소시킴으로써 안정적인 생활 보장과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1) 김광진 의원 보도자료(2012.10.17.) 「청년아, 활짝펴라!」에 관련내용 게재.

록 하는 중요한 핵심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직업군인들의 주거복지 실태에 대한 분석과, 그동안의 군생활을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껴왔던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주거복지정책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하고, 직업군인 및 군인가족들의 실제적인 불만요소들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시함으로써, 향후 직업군인의 주거복지 정책 수립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2.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범위는 국방부 및 육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거복지정책 자료들을 기준으로 이를 분석함으로써 직업군인들의 주거복지 실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독신숙소 외의 군 주거시설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직업군인은 군 주거시설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만족·불만을 체감하고 있는 부양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등)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여 적용하였다.

1.2.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각종 관련 논문, 간행물, 법률 및 규정, 통계자료 등에 대한 문헌연구조사를 통해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국회도서관에 소장된 관련 학위논문과 인터넷, 인트라넷을 통해 습득한 각종 관련자료들을 참고하였으며, 군(軍) 내부자료는 보안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의 공개된 자료들을 활용하였고, 내용의 시사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최근 2013년 국방부 국정감사 자료 및 각종 언론 보도내용 등을 적극 활용하였다.

본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제 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 연구의 범위와 방법을 기술하였고, 제 2장에서는 직업군인의 복무환경과 주거환경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주거환경의 열악함과 개선의 필요성을 먼저 제시하고, 우리 군이 적용하고 있는 각종 주거지원 정책과 복지정책의 기본 틀이 되는 「군인 복지기본계획」의 개략적 이해를 돕기 위한 개념과 추진방향 등을 기술하였고, ‘주거복지’와 ‘주거만족도’에 대한 개념을 기술하였다.

제 3장에서는 외국군의 주거복지 정책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해 알아보았고, 「2008 군인복지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직업군인의 주거복지 실태에 대하여 문화, 환경, 사기 및 복지 측면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현재 한국군이 추진하고 있는 군인 주거복지 정책의 주요 문제점과 한국군의 주거개선 사례를 함께 제시하였다.

제 4장에서는 제 2장 및 제 3장에서 제시된 군인주거복지 정책의 주요 문제점들에 대해서 주거지원 방법 및 예산, 주거환경 및 교육, 주거시설의 관리 등 3개 측면에서 ‘자가(自家) 보유를 증대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개선’ 등 수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제 5장에서는 앞 장에서 제시한 주요 내용들을 요약, 정리함으로써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참고자료는 최근 3~4년 내에 작성된 자료들을 최대한 참고하였으며, 지난 2008년 KIDA(한국국방연구원)에서 작성한 「2008년 군인 복지실태조사」 이후 최신화가 미흡한 부분은 「2012 국방백서」, 2013년 국방부 국정감사 자료, 각종 언론보도 자료 등을 활용함으로써 자료의 신뢰도를 높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제시된 주거복지 정책 실태에 대한 개선방안들은 변화하는 여러 주변 환경 및 안보상황을 고려시 충분히 적용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되며, 향후 군 주거복지 정책 수립시 이를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보완 발전시킨다면 직업군인의 주거복지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Ⅱ. 직업군인의 주거복지 개념과 특성

2.1 직업군인의 복무환경과 군인 주거시설

2.1.1 직업군인 복무환경의 특수성

2.1.1.1 신분적 특징

군 조직은 크게 간부와 병사 두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분별로는 장교(소위~대장, 10계급), 준사관(준위, 1계급), 부사관(하사~원사, 4계급), 병(이병~병장, 4계급) 등 4계층 19계급으로 세분화되어지는 현역과, 군무원 및 민간인력 등 64만여 명에 이르는 많은 구성원이 군의 곳곳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 군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군 복무를 의무복무제로 적용하고 있는데, 병역의무로서가 아니라 직업으로서 군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직업군인’이라고 칭하며,²⁾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군인의 신분을 특정직 공무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표 1> 공무원의 구분

구 분	내 용
경력직 공무원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 1. 일반직공무원 :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박인규. (2012). “군인아파트 거주자의 주거만족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p.14.

〈표 1〉 공무원의 구분(계속)

구 분	내 용
경력직 공무원 (계속)	2. 특정직공무원 :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특수경력직 공무원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 1. 정무직공무원 :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필요한 공무원,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 비서관, 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출처: 국가공무원법 [법률 제11992호], 제2조 (공무원의 구분).

2.1.1.2 조기 정년

그러나, 일반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정년 60세를 보장하고 있는 반면에, 직업군인은 국가방위라는 업무의 특성상 군인사법에 의해 다음 〈표 2〉, 〈표 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비교적 짧은 정년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짧은 정년제도는 자녀의 학업, 결혼, 주택마련 등 생애 최대의 지출 시기와 중첩되고 있어 상위계급으로 진출하지 못하고 정년제한에 의해 전역을 하게 될 경우 심각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 정년연장에 대한 법률을 공포하여 다수의 계층이 정년 보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직업군인의 경우 여전히 정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다수의 근무자들이 복무에 전념하지 못하고 전역후 제 2의 직업을 구하기 위한 노력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2〉 현역 정년

구 분	대령	중령	소령	위관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연령정년(세)	56	53	45	43	55	55	55	45	40
근속정년(세)	35	32	24	15	32				
계급정년	중장 : 4년, 소장 : 6년, 준장 : 6년								

* 출처: 군인사법 [법률 제11560호], 제8조 (현역정년).

〈표 3〉 주요 공무원 정년 현황

구 분	일반공무원, 군무원, 경찰, 소방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교육공무원
연 령	60세	판사 : 60세 대법원장 : 70세	검사 : 63세 검찰총장 : 65세	60세 (일부직위 : 64세)	교사 : 62세 대학교수 : 65세

* 출처: 국방부. (2013a). 2013년 국정감사자료.

2.1.1.3 격오지 근무 및 잦은 근무지 이동

또한 직업군인의 근무지는 국가방위라는 임무의 특성상 적과 접하고 있는 전방, 해안지역 등 격오지에 집중하고 있고, 최근에는 군사기지 또는 훈련장 등이 지역경제를 저해하는 요소로 인식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기존의 도심지역에 위치하고 있던 부대들 역시 외곽지역으로 이전하고 있는 추세이다.

다음 〈표 4〉에서 제시된 공무원들의 근무지역별 비율에서 보듯이, 일반 공무원들의 경우 자의(自意)에 의해서 근무지와 거주지역을 선택함으로써 연고지 및 중소도시 이상의 인구 밀집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으나, 직업군인의 경우는 상급부대 인사계획에 의해 연고지와 무관한 지역에서 근무하게

되며, 주기적으로 근무지를 옮겨 근무하게 됨으로써 많은 직업군인 및 가족들이 잦은 이사로 인한 장기간 별거, 경제적 불이익, 자녀 교육문제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

〈표 4〉 근무지역별 비율

구 분	군	공무원			사 회
		국가직	지방직	전 체	
면이하 (격오지)	29.6% (5%)	5.8%	8.1%	6.6%	10.2%
군·읍	19.3%	7.0%	13.1%	9.0%	8.3%
중·소도시	33.2%	41.8%	40.0%	41.2%	34.4%
대도시	17.8%	45.4%	38.7%	43.2%	47.1%

* 출처: 김승조. (2013). “직업군인 주거복지 현황과 개선방안”, 원광대학교, p.8.

2.1.1.4 북한의 위협에 노출

이상과 같이 직업군인과 가족들은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직업군인의 특수성에 대하여 고려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생존의 위협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군은 유사시 신속한 작전 반응 속도를 위해서 주거지를 부대와 일정 시간 거리 이내로 근접하게 위치시키고 있다. 다시말해서 적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생존 위협에 군인 뿐만 아니라 군인가족 역시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대피소 문제 등이 부각되자 행정안전부는 5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평도를 포함한 서해 5도 지역에 대피소를 구축한 바 있다. 그러나, 2011년 소방방재청에서 접경지역의 대피소 소요를 조사한 결과 380여개의 대피소 소요를 산출하였는데 2013년 전반기까지 완공된 것은 60여개소에 불과하며 그나마 완공된 곳 역시 북한의 화생방 공격

에 대한 방호나 장기 체류 기능이 고려되지 않은 임시 대피소 개념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³⁾

특히 전면전 보다는 국지도발의 가능성이 높은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접경지역 또는 적의 장사정포 사거리 이내의 지역에서 생활해야만 하는 많은 군인가족들은 그런 상황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며 지내게 된다.

2.1.2 직업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앞에서 제시된 직업군인의 복무환경 특수성은 직업군인 및 가족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웬만한 희생정신과 책임정신 없이는 감당하기 힘든 직종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부터 2년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현직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759개 직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는 육군장교가 49위를 차지하여 비교적 만족도가 높게 평가⁴⁾된 반면에, 지난 2008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조사한 ‘대학생 직업선호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전체 24개 직종 중 20위로 낮게 평가되어 군인이라는 직종에 대한 일반국민과 군인의 시각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선호도는 시대 상황별로 지속적으로 변화하여 왔다. 다음 <표 5>에서 보듯이 1950년대 군인은 최고의 인기 유망직종으로 고려되었으나, 최근의 각종 조사결과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전문 직종을 선호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잡코리아와 현대경제연구소에서 전국 20~30대 취업준비생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호직업 조사 결과에서는 선호직업은 공무원(27.9%), 유명 벤처 및 중견기업(26.4%), 중소기업(23.6%), 대기업(22.1%) 순으로, 희망연봉은 평균 2,790만원으로 분석⁵⁾되었는데, 이는 최근 지속되는 취업난으로 젊은 층들의 의식이 비록 급여는 낮더라도 취업후 정년까지 보장받으면서 안정적

3) 연합뉴스(2013. 4. 9). “北 도발 대비 접경지역 긴급대피시설 287곳 부족” 등 다수.

4) 이데일리(2010. 3. 20). “직업만족도 1위는 초등 교장..선호도 1위 교사는 90위”.

5) 다이네믹부산 제1569호(2013. 3. 20).

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직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5〉 시대별 유망 인기직업 변천사

구 분	유망 인기 직업
1950년대	군인, 의사, 영화배우, 권투선수
1960년대	택시기사, 자동차 엔지니어, 다방 DJ, 은행원
1970년대	트로트가수, 건설기술자, 무역업 종사자, 화공 엔지니어
1980년대	증권·금융인, 반도체 엔지니어, 야구선수, 탤런트
1990년대	프로그래머, 벤처기업가, 웹마스터, 펀드매니저
2000년이후	공인회계사, 국제 재무 전문가, 커플매니저, 사회복지사

* 출처: 매경이코노미 제1592호(2011. 2. 2).

앞서 설명하였듯이 군인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지닌다. 그렇다고해서 위 선호직업 조사 결과에서 언급된 ‘공무원’에 ‘군인’이라는 직업에 대한 선호도가 반영되었는지는 단언하기가 힘들다. 그 이유는 지난 2008년 이후 직업 선호도에 대한 많은 실태 조사를 하였으나 ‘군인’이라는 직책을 명시하지 않고 ‘공무원’, ‘전문직’ 등으로 통합하여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여성의 장교, 부사관에 대한 지원이 증가⁶⁾하고 있어 군인에 대한 일반인들의 선호도가 다소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으나, 남군 ROTC의 경우 지원 경쟁률이 예년에 비하여 1/4 수준으로 감소하여 우수 소대장 자원의 확보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시 일반국민들의 군인에 대한 직업으로서의 선호도는 그다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008년 국방연구원에서는 ‘군 직업의 기피 이유’에 대해 다음 〈표 6〉과 같이 군에 대한 부정적 인식(24.7%), 낮은 보수(20.7%), 열악한 근무환경(18.9%) 순으로 분석하였다.

6) 여군 학사장교 지원율 증가 : 2010년 4.6:1, 2011년 5.5:1, 2012년 6.4:1.

〈표 6〉 군 직업 기피 이유

(단위 : %)

구 분	직업군인			군인가족		
	전체	장교	부사관	전체	장교	부사관
군에 대한 부정적 인식	24.7	17.2	28.8	22.9	14.3	27.5
낮은 보수	20.7	13.7	24.3	26.0	19.8	29.6
열악한 근무환경	18.9	24.3	16.2	14.7	18.1	12.8
전역후 보장미흡	10.2	12.7	8.8	11.6	14.2	10.2
잡은 이사	8.1	10.9	6.4	9.4	17.0	5.2
근무시간 과다	7.8	6.7	8.5	6.2	4.3	7.4
불안정	5.4	11.6	2.0	5.6	10.5	3.0
열악한 복지수준	2.0	1.6	2.3	1.5	1.8	1.3
기 타	2.2	1.2	2.7	2.1	—	3.1

* 출처: 장지환. (2009). “직업군인의 주거지원 정책에 관한 개선 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p.59.

조사대상이 직업군인 및 군인가족인 점을 고려시 ‘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과거 군사정권의 기억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인식이라기 보다는 경험을 통해 체감되어지는 부정적 인식으로 판단된다. 다시말해 자신을 바라보는 주변인들의 시선, 즉 외적 주거환경의 불만족과 전반적인 안보의식의 해이에 따른 직업군인의 권위에 대한 평가절하 현상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2012~2030 국방개혁에 따라 2012년 64만 명 대비 2만 명의 병력을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감축하여 62만 명 규모로 조정하고, 하사 이상

간부 비율은 2012년 전체 병력 대비 28.9%에서 2017년에는 32.1%로 늘린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⁷⁾ 이 계획에 따르면 첨단무기와 장비가 제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전문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직업군인의 신분이 법률에서 보장하는 공무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부정적 요인들로 인해서 일반국민들이 선호하는 직장으로서의 매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1.3 군 주거시설의 이해

2.1.3.1 군 주거시설의 정의 및 종류

이종하(2012년)는 “군인 주거시설 거주만족도 핵심요인 도출에 관한 연구”에서 육군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군 숙소’라는 용어에 대하여 ‘숙소’는 ‘임시로 거주하는 시설’의 사전적 의미를 가지므로 ‘군 숙소’를 주거의 의미를 포함하는 ‘군 주거시설’로 표기⁸⁾하였고, 이창석(2003)은 현재의 주거시설이 단순히 잠만을 자는 공간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 생활요건인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조건 중 하나이며, 개인적인 삶과 가정의 생활을 영위하는 터전과 안식처라는 개념을 적용⁹⁾하였다.

이와 같은 개념을 적용할 경우 현재의 육군규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숙소’라는 용어는 ‘주거시설’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또한 ‘군 주거시설’과 ‘군인 주거시설’ 등의 용어도 혼재되어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대다수의 직업군인과 그 부양가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고, 병사까지 포함하고 있는 ‘군인’이라는 의미와 차별을 주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군 주거시설’로 통일하고자 한다.

군 주거시설은 입주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주거시설로서 그 사용목적과 형태에 따라 공관, 군 관사, 독신숙소로 구분되는데, 공관은 임무수행을 목적으로 장관급 장교, 대령급 지휘관 및 부지휘관에게 제공하는 주거시설을 말하

7) 국방부. (2012a). “국방개혁 기본계획(12~30)”.

8) 이종하. (2012). “군인 주거시설 거주만족도 핵심요인 도출에 관한 연구”, p.12.

9) 이창석. (2003). “부동산학개론”, 서울:형설출판사, pp.82~83.

고, 군 관사는 주거를 목적으로 근무지역에 자가를 보유하지 않고 가족과 동거하는 입주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군인 및 군인가족의 주거시설로서 건물형태에 따라 독립 및 연립관사, 아파트로 구분되며, 독신숙소는 근무지역에 자가를 보유하지 않은 미혼간부 및 가족과 동거하지 않는 입주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주거시설을 의미한다.¹⁰⁾

2.1.3.2 군 관사의 확보 및 운영

군 주거시설의 소요는 군 관사의 경우 간부(장교: 대위 이상, 부사관: 중사 이상)는 정원의 68%로 하되 서울지역과 계룡대·자운대 지역은 간부 정원의 70%로, 기타지역(5급지)은 66%로 판단하여 산출하며, 독신숙소는 하사, 중·소위 정원의 100%, 기혼간부 숙소 입주대상의 22%(독신자 20%, 기혼별거자 2%)를 소요기준으로 적용하여 선정한다.¹¹⁾

군 관사의 확보방안으로는, 축선별·지역별로 단지화하여 대단지화를 추진하고, 향후 안보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군 관사의 소요변동이 예상됨에 따라 중소도시 이상 지역에 대해서는 전세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격오지 및 읍면 지역은 건립 또는 매입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적용한다.¹²⁾

군 관사는 상시대기, 격오지 근무, 잦은 이사 등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작전지원과 주거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¹³⁾되며, 형태별 시설기준은 다음 <표 7>과 같다.

군 관사의 입주대상은 중사 이상 간부로서 근무지에 자가를 보유하지 않고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제한된다. 단, 기혼 초급간부(중·소위, 하사)와 근무지 내 유주택자라 할지라도 작전상 필수요원은 해부대 군 관사 관리위원회의 의결 후 부대장의 승인을 거쳐 입주할 수 있으며, 장애인 및 3인 이상의 다자녀 부양,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는 입주의 우선권을 부여한다.¹⁴⁾

10) 육군본부. (2012). 육군규정 121 복지업무규정, p.4.

11) 육군본부, 상계서, p.16.

12) 육군본부, 전계서, p.16.

13) 장선정. (2013). “일반인에 대비한 군인의 주거만족도 결정요인 차별성에 관한 연구: 고양, 파주, 포천지역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p.5.

14) 육군본부, 전계서, p.18.

〈표 7〉 군 관사의 형태별 시설 기준

구 분	공 급 면 적	비 고
아파트	80㎡, 93㎡, 106㎡, 126㎡, 132㎡	매입 : 93㎡ 이하
단독관사	83㎡(대대), 116㎡(연대), 165㎡(여단), 198㎡(사단), 231㎡(군단)	
독신숙소	23.1㎡(미혼), 43㎡(기혼별거 중령이하), 52㎡(기혼별거 대령)	

* 출처 : 육군본부, 전게서, pp.16~17.

〈표 8〉 군 관사의 평형별 입주 기준

공급면적	80㎡	93㎡	106㎡	126㎡
동거가족수	3인 이하	4인 이상	5인 이상 부(모) 동거	6인 이상 자녀 3인

※ 106㎡ 이상 : 동거 가족수가 2가지 형태 중 1가지만이라도 충족되면 적용 운영

* 출처 : 육군본부, 전게서, p.17.

군 관사의 평형별 입주기준은 위 〈표 8〉과 같으며, 군 관사 보유부대의 여건에 따라 군 관사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기준을 완화 또는 강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공관을 제외한 군 관사 입주자(기혼자 주거시설)에 대해서는 1999년 이전 건축물에 대해서는 3.3㎡당 2,000원, 2000년 이후 건립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3.3㎡당 3,000원의 관리비를 월별 징수하여 시설의 보수 및 관리유지를 위해 사용하며, 최근에는 권역별 관리비의 차별 징수 개념을 적용하여 선호층 및 신축건물은 많이 내고, 입주기피층 및 노후건물은 적게 부과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¹⁵⁾

또한 육군지침에 의해 다음 〈표 9〉와 같이 입주시에 급지별로 지정된 입주 보증금을 징수하여 정기예금으로 예치후 장·단기 보수집행 예산 또는 입주 대

15) 육군본부, (2013a), 모범적인 군 주거문화 조성, 「인사보」, 127:23.

기자에 대한 전세용자금으로 지원하며, 잦은 이사에 따른 주거시설의 원활한 순환을 위하여 퇴거사유가 발생후 특별한 이유없이 퇴거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표 10>과 같이 퇴거지연금을 부과하고 있다.

<표 9> 일반관사 입주보증금 징수 기준

(기준 : 3.3㎡)

구 분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5급지
금 액	일반	20만원	15만원	12만원	9만원	6만원
	BTL	30만원	20만원	15만원	10만원	8만원
지 역		• 서울 특별시	• 광역시 • 수도권 위성도시 및 인구50만명 이상의 시 • 수도권 이외의 인구 100만명 이상의 시	• 수도권 시급 도시 • 수도권 이외 지역의 인구 30만명 이상의 시	• 수도권 군급 도시 • 수도권 이외 지역의 인구 10만명 이상의 시군	• 1~4급지를 제외한 전지역

* 출처 : 이종하, 전계논문, p.20.

<표 10> 퇴거지연 관리비 징수 및 경과기간별 누진징수 기준

(기준 : 3.3㎡)

구 분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5급지
퇴거기한 후 180일까지	25,000원	15,000원	10,000원	9,000원	
181일부터 퇴거일까지	50,000원	30,000원	20,000원	18,000원	

- 전속자중 전입부대 군 관사 미배정시 전입부대 지휘관 확인서를 원소속 부대에 제출시 퇴거지연관리비 징수를 6개월(퇴거기한+4개월) 면제 가능

* 출처 : 육군본부. (2012), 전계서, p.20.

2.1.3.3 군 주거환경의 특성

국방부 자료와 200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직업군인은 평균 2.35개의 방이 있는 65.5㎡의 면적을 가진 주거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반면에 일반인은 82.8㎡의 면적에 2.67개의 방, 사회 저소득층의 경우 64.2㎡의 면적에 2.34개의 방이 있는 주거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직업군인의 주거환경이 사회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과 비슷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11〉 주거 환경 비교

구 분	직업군인	일반인	사회 저소득층
면적(㎡)	65.5	82.8	64.2
방수(개)	2.35	2.67	2.34개

* 출처 : 손병렬. (2011). “군인의 주거 안정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p.19.

김진표 의원은 군 관사의 면적별 보유현황에 대해 확인한 결과, 국민주택규모와 가까운 80㎡ 이상의 군 관사는 25.4%에 불과하며, 22.4%는 50㎡ 이하의 매우 협소한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¹⁶⁾

그러나, 강원대학교 방경식 교수는 ‘국민주택규모’의 개념을 85㎡ 이하의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세대당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라고 정의¹⁷⁾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부대 및 군 주거시설이 읍 또는 면 이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시 국민주택규모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군 주거시설의 비율은 더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16) 이종하, 전제논문, pp.14~15.

17) 인터넷 네이버 지식백과 : 방경식, “부동산 용어사전”.

2008년 국방부에서 실시한 군인복지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업군인의 75.7%가 관사 또는 독신숙소에서 살고 있으며, 기혼자의 68.8%가 군에서 제공하는 주거시설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아래 <표 12>와 같이 직업군인의 24.7%만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65.6%는 한 번도 소유했던 적이 없는 것으로 분석¹⁸⁾된 점을 고려시, 이는 앞으로 군의 주거복지정책이 자가보유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12> 계급별 주택 보유율

(단위 : %)

구 분	현 보 유					신 분 별				
	전체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장군	영관	위관	준사관	부사관
보유율	24.7	24.0	21.7	30.7	21.3	65.1	43.4	12.0	45.2	22.6
비 고	원사 : 50.0, 상사 : 28.8, 중사 : 17.3, 하사 : 6.0									

* 출처 : 국방부. (2008), 상계서, p.61.

위 <표 12>의 계급별 주택 보유율에 따르면 위관 장교 및 상사급 이하 부사관의 자가주택 보유율은 18% 미만의 아주 낮은 수준이며, 특히 10~20년 이상 중장기 근무자들 역시 자가보유에 대한 관심이 그다지 높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직업군인의 자가 보유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그만큼 군 관사에 대한 의존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군에서 무상으로 지원되는 주거시설과 군 대문화의 폐쇄성으로 외부와 단절된 환경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른 경제관념의 부족 등을 그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다.

김진표 의원은 2012년 국회 국방위에서 다음 <표 13>에서 보듯이 우리 군의 군 관사 보유율이 전체 소요 71,891세대 대비 70,365세대를 보유하여

18) 국방부. (2008). “2008 군인복지실태조사”, p.50.

97.9%의 높은 보유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2012 국방백서」에서는 2011년 484억원을 투자하여 748세대를 개선함으로써 총 소요의 99%인 71,524세대를 개선하여 소요 대비 99.5%의 군 관사를 확보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¹⁹⁾

그러나, 김진표 의원은 보유 건물의 23.6%가 건립된 지 20년이 지난 심각한 노후상태이고, 특히 노후 시설의 25.7%가 신축 개선 대상이라는 문제점을 제시하였는데, 군에서 건립한 군 관사의 대부분이 노후되었다는 점을 고려시 상당수의 직업군인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3〉 관사 소요대비 보유 현황(2010년 기준)

(단위 : 세대)

총 소요	계	양호관사	노후 /협소	전세	부족	비 고 (신축대상)
71,891	70,365	48,919	16,943	4,503	-1,525	18,468
(100%)	(97.9%)	(68.0%)	(23.6%)	(6.3%)	(-2.1%)	(25.7%)

* 출처 : 이종하, 전개논문, p.14.

이상의 분석을 통해서 위관 장교 및 상사급 이하 부사관들의 대다수가 자가를 미보유하고 있고, 영관 이상 및 준사관, 원사 계층 역시 50%를 겨우 넘어서고 있어 군인의 군 관사시설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일반국민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협소하고 노후된 환경에서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군인가족들이 군 주거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군 주거시설의 양적인 증가도 중요하지만 시설 노후화에 따른 질적 개선 및 자가보유율 증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19) 국방부. (2012b). “2012 국방백서”, p.220.

〈표 18〉의 2010년 보유량(70,365세대) 대비 2011년말 1,159세대 증가.

2.1.3.4 군 주거지원의 형태

2008년 2월 21일 제정된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는 ‘국가는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군 간부에게 숙소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관사지원의 근거가 되고 있으며, 「2012 국방백서」에서는 2011년 12월 말 기준 군인의 거주실태를 아래 <표 14>에 제시된 바와 같이 건립(46.5%), BTL(30.5%), 매입(16.7%), 전세(6.5%)의 순으로 보고하고 있다.

<표 14> 군 관사 개선 현황(2011년 10월말 기준)

구 분	계	건립	매입	BTL	전세
세대수	71,524	33,273	11,966	21,781	4,504
비율(%)	100	46.5	16.7	30.5	6.5

* 출처 : 국방부. (2012b), 전개서, p.220.

군 주거시설의 확보 방법은 크게 건립, 매입, 전세 등 3가지의 방법으로 구분되는데, ‘건립’은 군에서 직접 건립하거나 민간투자(BTL)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법이고, ‘매입’은 일반회계 예산을 투자하여 민간아파트를 매입후 관사로 활용하는 방법이며, ‘전세’는 일반회계 예산을 군 복지기금으로 전출 후 개인에게 무이자로 대부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²⁰⁾

손병렬(2011)은 군 주거시설의 건립과 매입에 대한 경제성의 상호 비교평가 결과, 다음 <표 15>에서 보는 것처럼 아파트의 매입이 훨씬 경제적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매입은 건립에 비하여 시설 확보, 보수 및 유지를 위한 비용 및 인력의 절감, 문화·환경적 여건 개선, 재산 가치적 요건 등의 면에서 여러 장점을 갖고 있으나, 매입의 경우 일반 분양이 종료된 후 미분양 아파트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비선호 층 또는 일조 및 통풍여건이 좋지 않은 방향의 시설이 매입되는 경우가 많아 거주자들의 불만 요인이 되기도 한다.

20) 김승조, 전개논문, p.36.

〈표 15〉 군 관사 건립과 매입 현황

구 분	관사건립	아파트 건립	아파트 매입
세대수/비용	5세대/11.6억원	53세대/11.6억원	78세대/74.3억원
세대당 비용	2.32억원	5.68억원	0.95억원

* 출처 : 손병렬, 전계논문, p.34.

민간투자(BTL) 방식이란,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 시설을 건설 후 소유권은 정부에 이전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사용 및 수익 권리인 시설관리 운영권을 획득하여 일정기간 정부에 임대함으로써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국방부는 2005년 9월 충주비행장 내 군 주거시설 개선 사업을 시작²¹⁾으로 2010년까지 2조 3,299억원²²⁾ 규모의 사업을 하였으며, 군의 노후 주거시설의 상당수가 이 방법을 통해 개선되어지고 있다.

최근 ‘기부대양여방식’을 적용한 개선 사례도 새로운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기부대양여방식’이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부 및 양여의 특례)’에 따라 이전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대체 시설물을 기부하고 대체 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이전 시설물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전주지역의 35사단 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을 예로 들 수 있는데, 국방부는 2005년 전주시와 합의각서 체결 후 2016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²³⁾ 이 방법은 향후 국방개혁기본계획에 의한 부대 개편 및 통·폐합 등이 예상되는 바, 군인의 주거시설 개선을 위한 긍정적인 방법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

전세금 지원은 군 관사의 부족 현상을 조기에 해소하고 향후 관사소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입주 대기자에게 일정금액의 전세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제도로써, 시중 전세가의 약 60~80% 수준으로 급지별로 차등화하여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시중 전세가가 현실성있게 반영되지 않아 부족금액은 은행 대출 등을 통해 해결하는 사례가 많으며, 그

21) 박인규, 전계논문, p.45.

22) 국방부, (2012b), 전계서, p.221.

23) 장선정, 전계논문, pp.12~13.

에 따른 이자부담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다. 문제의 해소 방안으로 국방부는 2009년 8월부터 급지별 지급기준을 일부 증액하고, 가용한 자금 범위 내에서 120%까지 지원의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다.

〈표 16〉 급지별 대부금 지원 기준

(단위 : 만원)

구 분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5급지
금 액	14,000	9,000	6,000	5,000	

- 최대지원 금액은 대부지원 기준금액의 120%까지 가능

* 출처 : 국방부근무지원단. (2013). “예규 1-2-4 전세대부 이자지원”

군이 제공하는 주거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직업군인에 대해서는 주거비 보조의 성격으로 주택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아래 〈표 17〉과 같이 1995년 이후 추가 인상없이 월 8만원씩 지급되고 있어 사실상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인상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표 17〉 주택수당 제도 변천

구 분	1983년 4월	1991년 7월	1992년 10월	1995년 1월~현재
지급대상	중사 ~ 중령		하사 ~ 중령	
지급금액	20,000원	30,000원	60,000원	80,000원

* 출처 : 김승조, 전계논문, p.39.

이상의 방법 외에 국방부는 장기근속 직업군인들의 자가 마련 기회 제공을 위해 ‘군인공제회 분양’과 ‘대한주택공사 특별분양’을 지원하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1984년 창립된 공익법인체로서 무주택 회원을 위한 내 집 마련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일정 회원자격을 갖춘 회원에게 시세보다 5~10% 저렴한 값으로 분양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대한주택공사 특별분양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10년 이상 근속 직업군인 등을 대상으로 일반 분양에 앞서 선 분양을 해주는 제도로써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을 하게 되는데, 이 중 1~3%가 군에 배당되어 분양되고 있다.²⁴⁾

이상에서 살펴 보았듯이, 국방부는 직업군인들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하여 건립, 매입, BTL, 전세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직업군인들의 자가 확보율 증가를 위해 타기관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등 많은 노력을 추진하고 있으나, 많은 부분에서 주거만족도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2.2 군인복지기본계획

2.2.1 군인복지의 개념 및 기능

2.2.1.1 개념

김병찬·정일환(2010)은 “튼튼한 국방력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가의 모든 요소와 관련이 되며, 직접적으로는 군의 우수한 인적, 물적 자원의 확보 문제이기도 하다”고 하였으며, 특히 “군의 우수한 인적자원의 확보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한기정(2008) 등의 논문인용을 통해서 군에서 우수한 인적자원의 확보를 위한 핵심요소로서 교육 및 복지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²⁵⁾

국방부에서는 ‘군인복지’를 군인들에 대한 복지증진을 통해 전투력 향상을 도모하고 우수인력의 확보 및 유지를 위해 군 조직 구성원과 그 가족 및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제대군인에게 정신적, 물질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제 급여, 시설 및 서비스의 총체로 정의²⁶⁾하고 있으며, 「군인복지기본계

24) 장지환, 전제논문, pp.20~21.

25) 김병찬·정일환. (2010). 주요 국가의 직업군인을 위한 교육·복지제도 비교 분석 연구, 「비교교육연구」. 20(4):176.

획」에서는 장교, 준·부사관 및 병 등 현역군인과 장기복무중인 장교, 준·부사관의 직계가족을 군인복지정책의 주요 지원대상으로 하며, 10년 이상 복무 후 전역한 예비역 군인도 간접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²⁷⁾

2.2.1.2 기 능

「2012 국방백서」에서는 군인복지가 군인의 삶의 질 및 사기를 결정하며 무형전력 유지의 핵심요소라고 기술하고 있다.²⁸⁾

군인복지의 기능은, 첫째, 군인으로 하여금 전투준비태세 및 전투력 유지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함으로써 군의 전투력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며, 둘째, 군의 복지수준은 국가수호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며 군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상징하여 의무복무 군인에게는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는 등 적극적 병역이행 문화조성에 기여한다. 셋째, 치열한 인력 경쟁시장에서 군에 대한 직업적 매력을 높임으로써 국방의 중추인재를 우수 인력으로 충원, 장기 복무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넷째,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군부대는 상대적으로 낙후·소외된 지역의 복지여건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고, 지역주민, 지자체 및 사회단체와 함께 지역발전의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²⁹⁾

2.2.2 군인복지기본계획의 배경과 의의

「2012 국방백서」에서는 군 복무자가 일반 조직의 구성원과 다른 특수성에 대해서 ‘첫째, 유사시 국가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명을 담보로 임무를 수행하며, 둘째, 상시 근무태세 유지 및 격오지 위주의 근무, 잦은 이사 등으로 인해 안정된 가정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26) 국방부. (2009a). “국방기본정책서(2009~20025) 부록 #11 군인복지기본정책서”, p.3.

27) 국방부. (2009a), 상계서, p.5.

28) 국방부. (2012b), 전계서, p.206.

29) 국방부. (2009a), 전계서, pp.5~6.

셋째, 대부분 생애 최대 지출기(45~56세)에 조기 전역을 하며, 넷째, 사회와의 직업적 연계성이 부족하여 재취업이 제한된다.’는 4가지 특수성을 제시하고 있다.³⁰⁾

국방부는 이러한 군 복무 환경의 특수성들이 적절한 수준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군의 사기를 높이고 나아가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군인복지 정책의 수립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를 위해 2007년 12월 21일 법률 제8371호로 「군인복지기본법」을 제정하였고, 2008년 3월 1일부로 시행하게 함으로써 군인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의 안정을 위한 군인복지 개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군인복지기본법」에서는 제6조 ‘군인복지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규정에 따라 5년마다 군인복지 실태조사와 더불어 기본계획의 수립을 요구하고 있는데, 「군인복지기본계획」은 이를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군인의 복지 현실에 대한 군내·외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군인복지의 발전 방향과 추진사업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재정적 지원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게 되었으며, 국방부 및 각 군의 복지정책 계획 수립의 기본지침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³¹⁾

2.2.3 군인복지기본계획의 성과 및 추진방향

2.2.3.1 성 과

2009년 수립된 「제1차 군인복지기본계획」은 군복 입은 것이 자랑스럽고, 군인의 길이 영광스럽도록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목표 하에 수립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첫째, 보수체계 개선, 군인연금제도 개선 등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기본 생활여건 제공을 골자로 하는 ‘기초복지 분야’, 둘째, 자녀 학습여건 보장,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 등 군인 가족의 어려움 경감을 위한 ‘가족복지 분야’, 셋째, 자기개발 지원, 전천후 체력단련 여건 보장 등 사회 발전과 병행하는 선진 문화생활 구현을 다루는 ‘선진 문화 복지 분야’, 넷째,

30) 국방부. (2012b), 전게서, p.207.

31) 국방부. (2012b), 전게서, p.207.

복지시설 경영 개선, 효율적 복지기금 관리 등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효율적 복지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복지 인프라 분야’ 등 4대 복지영역을 다루고 있으며, 점진적·체계적 개선노력을 통해 부분적이거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주거복지분야를 한정하여 살펴 본 현재까지의 주요 성과는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전세자금의 인상, 주택청약시 거주지 제한 폐지, 군 간부 주거시설의 점진적 개선, 이사화물비 현실화 추진 등 많은 연구가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던 개선요구사항들이 조금씩 개선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자가보유율이 30% 미만의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직업군인들의 내집 마련 지원의 한 방안으로, 2010년 8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보금자리주택을 특별공급 받은 군인에 대해 입주 및 거주 의무기간을 일부 적용받지 않도록 하였고, 1~2년 단위로 근무지를 변경하는 군복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군인이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전국에서 주택청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2011년 8월 국토해양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시킨 사례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³²⁾

또한 2012년부터는 군 관사에 입주하지 못하는 군 간부들을 위해 기존 4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지원되던 전세자금을 5천만원에서 1.2억원까지 인상하였고, 노후·협소한 군 관사에 대해서는 조기 개선을 위해 재정사업 이외에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지난 2011년 748세대를 개선하는 등 부분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³³⁾

2.2.3.2 추진방향

현재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제2차 군인복지기본계획」에서는 「제1차 군인복지기본계획」 시행간 식별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기초로 다음 <그림 1>에서 보듯이 기존의 4대 복지영역을 8대 복지영역으로 구체화하여 재편을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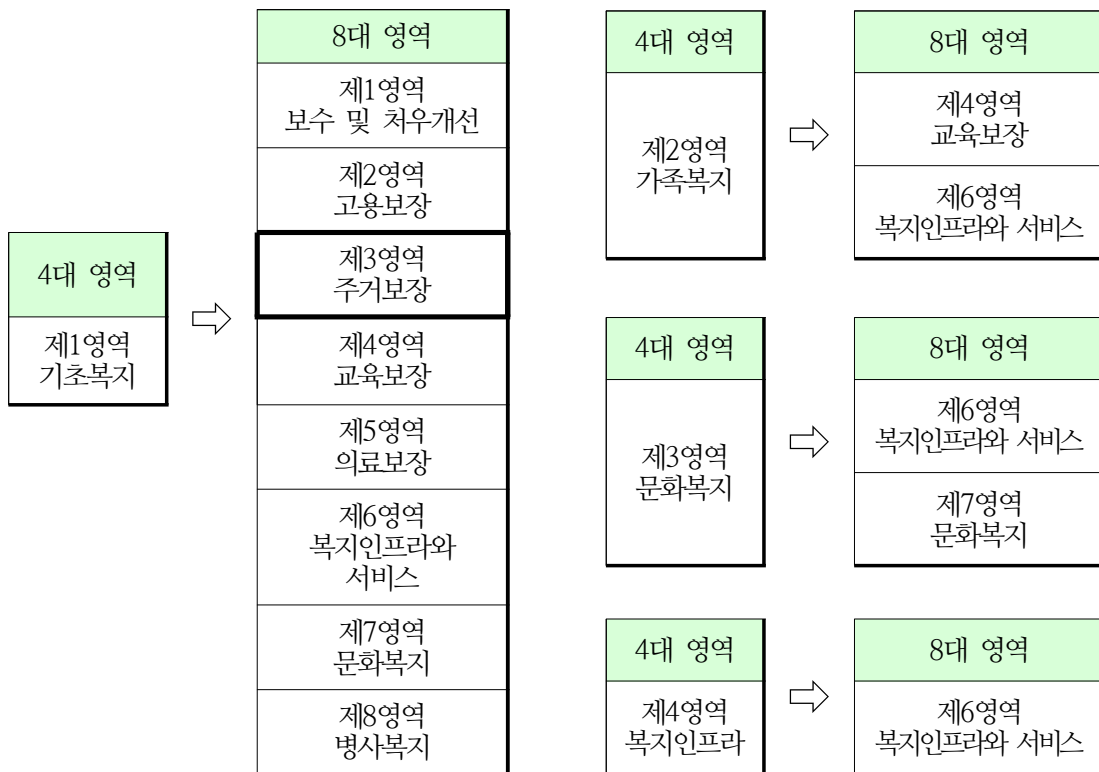
32) 국방부. (2012b), 전게서, p.208.

33) 국방부. (2012b), 전게서, p.220.

하고 있다.

특히 제3영역에서는 주거(주택)의 의미를 인간관계를 이어나가는 장소인 동시에 개인과 한 주거단위 집단체의 사회적·경제적 환경 안에서의 상대적인 입지의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욕구를 2차적으로 채울 수 있는 준비공간으로 보았다. 다시말해서 적절한 주거를 제공해 주거나, 주거를 정할 때 그 주변의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비롯한 이웃과의 관계, 그 지역에 대한 사회적 태도, 직장과 교육적·문화적 기회로의 접근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를 갖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바로 주거보장이라고 보았다.³⁴⁾

〈그림 1〉 새로운 군인복지 8대 복지영역



* 출처 : 국방부. (2011), 전개서, p.7.

34) 국방부. (2011). “2차 군인복지기본계획 작성방향 연구”, 「한국군사회복지학회」, p.8.

국방부는 아래 <표 18>과 같이 주거복지 개선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체계적인 개선을 추진해가고 있다.

<표 18> 제3영역(주거보장) 세부 추진과제

구 분	세부추진과제	
제3영역 주거보장	장기복무	• 노후/협소 군 관사 개선 • 주거지원 정책의 탄력적 운용 • 군 관사 입주 기준의 합리적인 재설정 • 주택수당 현실화 • 전군 통합관사 및 권역별 단지화 숙소 지원 • 군숙소 신축개선 시 빌트인 공법 도입 • 이사비용 현실화 • 주거지원 정책의 일원화 추진 • 군인공제회 택지공급 확대 • 주택자금 대출 지원 • 주택 청약시 거주지 요건 완화 • 수요자육구중심 주거지원정책 마련 • 내 집 마련 지원
	단기복무	• 주거 및 생활여건 개선 • 기혼 초급간부에 대한 군 숙소 입주 허용 • 독신자 숙소 조기 확보 및 생활 편의시설이 구비된 숙소 지원

* 출처 : 국방부. (2011), 전게서, p.13.

2.3 주거복지와 주거만족도의 이해

2.3.1 주거복지의 의미 및 필요성

2.3.1.1 주거복지의 의미

‘주거(住居)’의 사전적 의미를 알아보면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머물러 사는 곳으로서 가옥 외에 대지를 포함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장소, 하나의 세대가 독립하여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축 또는 개축된 건축 혹은 완전히 구획된 건물의 일부로 정의되어진다.³⁵⁾

주거의 문제는 인간의 본질적 기본욕구인 의(衣), 식(食)의 문제와 함께 인간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로 고려되어지는데, 철학자 하이데거(Martin Heidegger)와 볼노우(Otto Friedrich Bollnow)는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의 밀접성에 대하여 인간은 거주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 체류하면서 공간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거주하는 존재’로 보았다.³⁶⁾ 다시말해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은 개인에게 영향을 줌으로써 새로운 사회의식 구조를 발생시키게 되며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주거공간과 인간은 밀접한 유기적 관계를 맺게 된다. Bognar는 ‘거주한다’의 의미를 단순히 집이나 방과 같은 물리적 환경을 점유한다는 합리적·실용적 의미를 초월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존재를 세계 내에서 확인하고 정립하려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과 행위로 설명하였다.³⁷⁾

주거에 대하여 이주택(1994)은 거의 모든 삶의 시간을 일관되게 충족시키는 인간 본질의 기본요소로³⁸⁾, 배영구(2010)는 인간의 기본 욕구를 구성하는 물질 생활 기반으로서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정신적 안식처이며 교육·사회·문화·정치 발전의 제공처로서 필수 불가결한 재화이며 자원으로 ‘생활의 질’과 ‘사회복지 수준’의 결정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³⁹⁾

35) 손병렬, 전계논문, p.6.

36) 박인규, 전계논문, p.8.

37) 박인규, 전계논문, p.8.

38) 이주택. (1994). “주거환경 만족도 요인구조 분석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p.7.

39) 배영구. (2010). “군인 주거복지 제도 개선방안 연구”, 조선대학교, p.12.

‘주거복지’라는 말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그 정의를 명확하게 내리기는 쉽지가 않다. 그러나 아래 <표 19>와 같이 많은 연구기관과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된 주거복지의 정의를 종합해 볼 때 ‘주거복지’란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수준의 주거지를 만들어 주는 것’⁴⁰⁾으로 귀결할 수 있다.

<표 19> 주거복지의 정의

저 자	발 행 처	정 의
장세훈 (1999)	한 국 도 시 연구소	• 주택이 없는 자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고 부적합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주거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가가 불안정한 자를 보호하는 등 국가를 위시한 공공 부분이 사회복지차원에서 모든 사회구성원이 누릴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보장하는 것
이성우 외(2002)	대 한 주 택 공 사	• 협의 : 개인 및 가족의 주거기본욕구를 해결함에 있어서 사회 복지적 주거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하는 것 • 광의 : 전체국민의 주거측면에서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집합적 책임
김혜승 외(2004)	국 토 연구원	• 협의 : 서비스의 객체 즉 수혜 대상자를 국민의 일부로 제한하여 이들의 기본적 주거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금전적 지원 및 기타 서비스 • 광의 : 전체 국민의 주거 측면에서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집합적 책임
김영태 (2008)	한 국 주 거 학 회	• 사회구성원이 자신의 주거소요(housing needs)에 부합하는 적정수준 이상의 주택에 거주하되, 소외됨이 없이 공동체 생활을 적극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상태

* 출처 : 손병렬, 전계논문, p.8.

40) 손병렬, 전계논문, p.7.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주거공간의 충족요건으로 점유의 안정성, 주거비 부담 가능성, 최저 주거기준 확보, 적절한 주거기반 시설 및 서비스, 접근가능성, 적절한 입지, 문화적 적절성 등이 충족되어야 한다⁴¹⁾고 하였고, 이주원(2012)은 주거복지정책을 모든 사람이 주거와 관련한 차별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⁴²⁾하고 있다.

〈표 20〉 적절한 주택의 구성요소

구성요소	내 용
① 점유의 안정성	• 임차인은 임차형태와 상관없이 강제퇴거의 위협으로부터 임차기간을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함.
② 주거비부담가능성	•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처지에서 적절한 주택을 구할 수 있어야 함.
③ 최저주거기준확보	• 주거공간이 너무 좁아서는 안되며, 추위, 습기, 더위, 비, 바람 등을 막을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함.
④ 적절한 주거기반 시설 및 서비스	• 깨끗한 물, 전기,채광, 상하수도, 도로, 조리용 에너지사용, 세면시설, 음식물 저장 등의 필요한 시설 및 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
⑤ 접근가능성	• 노인, 장애인, 어린이, 환자 등의 조건에 관계없이 접근하기 용이한 주거 조건을 갖추어야 함.
⑥ 적절한 입지	• 생산활동의 기반으로 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야 하며, 보건소, 학교, 탁아소 등의 사회시설로부터 인접한 곳에 위치해야 함.
⑦ 문화적 적절성	• 주택의 건설방식에 있어 그 재료나 형태 등의 측면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해야 함.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주거복지란 단순 복지개념을 초월하여 ‘인권’이라는 권리 개념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위의 〈표 20〉에서 제시된 ‘적절한 주택의 구성요소’는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직업 군인들의 주거환경 실태를 진단하고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좋은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1) 남원석. (2007). “주거복지의 개념과 저소득세대의 주거문화에 대한 적용”, 주택도시연구원, p.25.

42) 이주원. (2012). “주거복지, 복지에서 권리로”. 「복지동향」, p.28.

2.3.1.2 주거복지의 필요성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전월세 대란의 문제점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일반국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유지에 커다란 부담 요소가 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안정을 위한 여러 조치에도 불구하고 최근 폭등하는 전셋값과 전세물량의 부족 현상은 이사철 많은 무주택자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인간의 기본적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2011년 9월 실시된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약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던 박원순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것도 이러한 주거문제의 심각성이 투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급속한 국가경제의 성장과 함께 국민들이 체감하는 복지수준 역시 함께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 및 시대적 상황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과거의 주거복지정책에 고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일 것이다.

주거에 대한 인식은 경제수준이 미흡하였던 과거에는 말 그대로 생계수단을 유지하는 가운데 단순한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받아들여졌으나, 현재는 휴식 뿐만 아니라 공간, 교육환경, 교통수단, 오락 등 환경적 요인을 복합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환경적 변화를 고려하여 직업군인의 주거복지에 대한 개념도 바뀔 필요가 있다.

김승조(2013)는 군에서의 주거복지란 직업군인이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기 위해 안정된 가정을 이루고 가정문제로 인한 걱정해소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주거공간의 확보와 제공을 통한 복지 지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⁴³⁾

많은 직업군인들이 국가방위라는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전·후방 각지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이 직업은 고결한 희생정신과 책임정신이 없이는 완벽한 임무수행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시 직업군인이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주거복지의 관심과 개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3) 김승조, 전계논문, p.22.

2.3.2 주거만족도의 개념 및 영향요인

2.3.2.1 주거만족도의 개념

주거복지 실태를 논하기 위해서는 주거복지의 향후 개선소요를 도출함으로써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보완시켜 나가기 위하여 사용자의 주거환경에 대한 요구사항 또는 만족·불만족 요인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2009년 국방부 군인복지기본계획에 의하면 아래 <표 21>에서 보듯이, 군인 및 군인가족들이 복지향상을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받기를 원하는 것은 주택 및 주거문제(39.1%), 자녀교육(30.4%), 문화 여가활동(14.3%)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1> 복지향상을 위한 우선 지원 희망사항

분 야	계	주택 /주거	자녀 교육	출산 /보육	문화여가 활동	건강	군가족 공동체	기타
비율(%)	100	39.1	30.4	7.2	14.3	4.3	2.3	2.4

* 출처 : 홍성범. (2010). “군인관사 주거만족도에 대한 연구”, 세종대학교, p.11.

<표 22> 군과 사회의 주거 불만족 사항 비교

구 분	주변 환경	교통	편의복지 시설	주차 시설	공해	교육 환경	물가	기타
사회(%)	13.5	23.6	14.9	18.5	13.3	6.6	2.9	6.7
군(%)	5.0	22.2	29.0	4.8	6.9	10.5	13.8	7.8

* 출처: 김승조, 전개논문, p.35.

군과 사회의 주거 불만족 사항에 대해서는 위 <표 22>에서 보듯이, 편의 및 복지시설(29.0%), 교통(22.0%), 물가(13.8%)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사회는 교통(23.6%), 주차시설(18.5%), 편의 및 복지시설(14.9%) 순으로 나타나는 등 소속한 집단의 유형과 성격에 따라 만족·불만족의 유형은 다르게 나타난다.

이상과 같이 주거만족 및 불만족 요소를 평가하는 것은 주거복지의 질적 개선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주거만족도’의 개념 설명에 앞서 먼저 ‘만족도’의 의미를 간단히 살펴보면, Nuegarten은 현재 생활을 구성하고 있는 활동에서 얻는 즐거움, 개개인 각자가 자신의 인생의 질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금까지의 생활을 절대적으로 수용하는 의미, 이루고자하여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과 성취한 목적간의 일치감으로 인생의 주요 목적을 달성했다는 감정,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노력과 그 결과를 포함한 전반적인 생활의 품격으로 정의⁴⁴⁾하였으며, Burr, Hill, Nyr, Reise 등은 주관적 기대와 실제 보상과의 일치 정도, 즐거움과 즐겁지 않음, 행복과 불행 사이의 정도로 보았는데, ‘행복’이 감정에 관련된 반면 ‘만족’은 지각·판단의 영역으로 설명하였다.⁴⁵⁾

김태진은 주거만족이란 거주자의 선호와 만족에 영향을 주는 주거환경 내에서 거주자가 느끼는 정도로 설명⁴⁶⁾하였고, 한경원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거주자의 주관적인 만족의 정도로서 만족의 정도는 당연히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기대감, 욕구, 열망 및 이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다고 하였으며⁴⁷⁾, Fried Gleicher는 소득, 생애주기, 이웃관계, 사회적 지위 등이 주거의 사회적 환경에 반영되어 그 속에서 총체적인 반응이 된다고 기술하고 있다.⁴⁸⁾

여러 연구가들의 정의를 종합해 볼 때, 주거만족이란 주거환경에 대한 거주자의 주관적 평가로서 한 개인의 욕구가 변함에 따라 재평가됨을 알 수 있다. 거주자의 주거만족도는 주거에 대한 객관적 기준 보다는 경험, 상황, 희망 수준에 의해 결정되는데, 많은 연구들이 생활만족과 생활의 질, 행복감이 사람들의 주거만족과 관련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주거만족도의 계량적 분석을 통해서 다수의 거주자들이 사

44) 손병렬, 전계논문, p.10.

45) 박인규, 전계논문, p.9.

46) 손병렬, 전계논문, p.10.

47) 박인규, 전계논문, p.10.

48) 박인규, 전계논문, pp.11~12.

회적·물리적 환경에 대해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창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간부분 뿐만 아니라 군 관련 부분의 주거지 평가에 있어서도 이 방법이 사용되는 이유가 된다.

2.3.2.2 주거만족도의 영향요인

주거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주택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많은 연구가들에 의해 사용되어 왔다. 이주택(1994)은 「주거 환경 만족도 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에서 아래 <표 23>과 같이 주거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를 제시하였다.

<표 23>에서 제시된 각각의 변수들은 거주자의 욕구와 가치, 사회적·문화적 규범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제공되었으나, 연구자의 연구목적과 성격에 따라 다소 상이한 결과를 얻을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만족도의 영향요인들이 고려된 분석을 통해 제한된 대상과 지역, 구성원의 요구수준이 무엇인가를 통계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나은 개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거주자의 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환경적 요인과 주거의 경험요소 등에 대해 보다 다양한 분류방법과 접근방법을 적용하고, 가능한 많은 변수를 고려함으로써 만족도를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표 23> 주거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수

변 수	내 용
사회적	이웃관계, 안전, 프라이버시 등
물리적	유지관리, 소음, 편리성, 주차시설, 조경과 수목, 美, 주택형태, 주택규모, 실내구성 및 시설, 조망 등
개인적특성	연령, 소득, 직업, 교육수준, 거주기간, 주택소유 형태, 가족수 등
서비스	대중교통 수단, 어린이 놀이터, 공공시설 등
근린주거	접근성, 주변환경, 공해정도, 위치, 학군 등

* 출처: 박인규, 전계논문, p.13.

Ⅲ. 직업군인 주거복지 실태 및 문제점

3.1 복지정책 실태 및 문제점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 속에서 더 나은 복지 혜택을 누리며 살고 싶어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일 것이다. 만약 이러한 욕구가 없었다면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도 굶주림에 시달렸던 비참한 과거를 계속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1950년대 6.25전쟁을 겪으면서 세계에서 최고로 가난한 나라, 다시 일어설 수 없는 나라로 인식되었던 우리나라는 지금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며 세계 일류국가로 우뚝 서 있다. 이것이 가능하였던 것은 아마도 전쟁의 경험과 대(代)를 이은 가난했던 환경이 우리 내면 깊숙히 ‘잘 살고 싶다’는 욕구로 작용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우리 군은 그동안 북한의 계속되는 군사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방위력 개선에 치중함으로써 군인 및 군인가족들의 복지 및 처우에 대해서는 관심이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다행히 군의 복지가 전력(戰力)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부각되면서 2007년 ‘군인복지기본법’이 수립된 후 현재까지 많은 개선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상황은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사이버테러 등 물리적·비물리적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고, 태평양에 대한 주도권 확보를 위한 미·중의 대립양상,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국 및 일본의 영토분쟁 등 주변국의 군비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지난 2013년 11월23일 중국의 이어도를 포함한 방공식별구역 선포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더불어 향후 우리나라가 지역분쟁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고하고 있어 긴장감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어, 우리 역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戰力) 확보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안보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국방예산은 안정적인 전력확충 및 국방개혁을 추진하기에는 다소 제한이 있다. 다음 <표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방부는 안정적 국방개혁 추진을 위해서는 국방예산이 매년 7% 수준으로 증가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였으나 기획재정부에서는 각각 2.8%, 4.0% 수

준으로 결정되었으며,⁴⁹⁾ 지난 2013년 5월 추경에서는 북한의 화력도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부에서 소요 제기한 K-9 자주포 및 K-10 탄약장갑차의 구입 예산(770억원)이 50%(385억원)로 삭감된 반면에 대다수가 지자체의 도로, 교통, 지역 특화사업 등 지역구 위주로 배정되는 등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안보상황의 심각성과 방위력 증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대다수 국민의 민생 및 복지사업을 우선시 할 수 밖에 없으므로 국방비 증액에는 소극적인 것이 현실이다.

〈표 24〉 국방예산 요구 및 검토 실태

구 분	국방부 요구	기획재정부 심의결과	비 고
중기 국방예산	7% 수준 유지	전년대비 2.8% 증가	4.2% 부족
2014년 국방비	6.9% 증액	4.0% 동결	2.9% 부족

* 출처 : 한국전력문제연구소, 상계서.

이러한 현실은 제한된 국방비 내에서 방위력 증강과 병력운영, 전력유지 등 모든 것을 해결하도록 요구하며,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 및 첨단 무기 배치 등 주변 안보상황을 고려시 우리 역시 국방비의 상당 부분을 방위력 증강 및 첨단화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직업군인의 복지를 위한 예산확보는 점차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이를 위한 충분한 재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최근 정부에서는 복지예산의 부족으로 국민연금, 학교 무상급식, 보육비 지원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난 2013년 10월,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국가 부채가 올해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하였고, 앞으로도 그 부채가 날로 증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일부에서는 정부의 복지정책이 과감하게 수정되지 않을 경우 2030년에는 국가부채 비율의 급증으로 인해 그리스와 같은 국가부도를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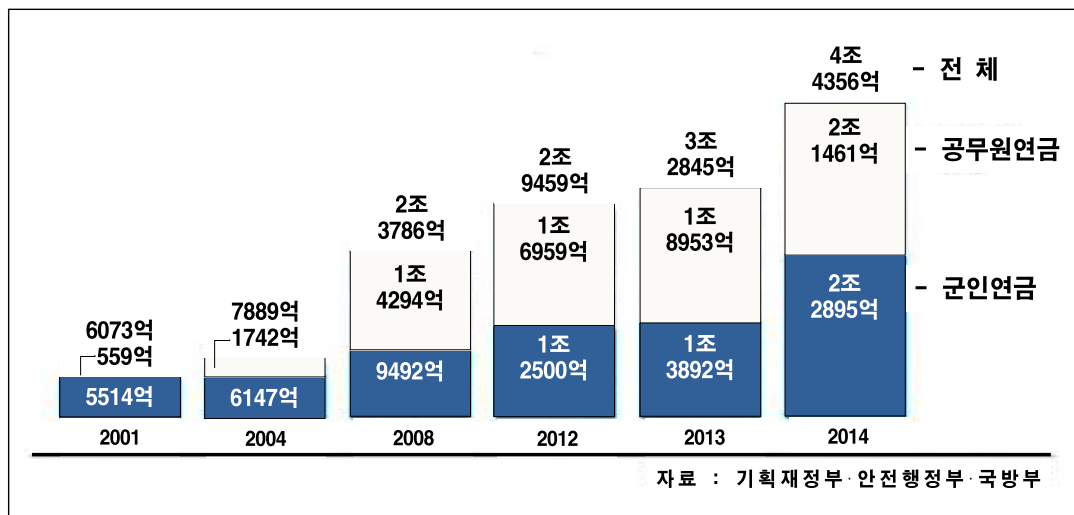
49) 한국전력문제연구소. (2010).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국방비 소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였다.⁵⁰⁾

각종 언론매체에서는 2001년 이후 국고로 부담하고 있는 공무원 및 군인연금의 부족액을 국가 부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이슈화 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들은 타 직업군에 비하여 비교적 짧은 정년의 특성을 가지는 직업군인들이 전역후 안정된 연금을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발생 시키고 있다.

〈그림 2〉 공무원·군인연금 재정보전액 추이

(단위:원, 2013년과 2014년은 기금운용계획상 수치)



* 출처:세계일보(2013.10.21), “공무원·군인연금, 국가재앙 되기 전에 수술해야”.

군인은 사기를 바탕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한 집단이다. 국방부는 군인의 복지증진을 통해 전투력 향상을 도모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재의 안보 현실은 군의 복지 보다는 방위력 증강을 우선할 수 밖에 없도록 강요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우리 군의 복지수준은 일반 사회의 환경 수준과 비교하여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어 직업군인 및 가족들의 사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가·복지는 전승(戰勝)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군 임무의 특성상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정책분야이다. 지금까지 우리 군은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도의

50) 중앙일보(2013. 10. 17) 기사, 「나라빚 1000조원, 감당이 안된다」.

보완, 예산반영, 법령 개정 등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으나 국가 재정의 한계는 많은 면에서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무리한 복지정책의 추진은 오히려 더 큰 문제점으로 다가올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미국 등 일부 외국군의 주요 복지정책 사례를 통해서 우리 군이 착안할 수 있는 시사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일반 국민들의 복지환경과 직접적 비교대상이 되는 주거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직업군인들의 주거복지 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현상 및 문제점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3.2 외국군의 주요 복지 정책

3.2.1 주요 국가별 군 복지지원 정책

이번 연구를 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비교 연구할 수 있는 외국군의 최신 군 복지정책에 대한 자료가 거의 부재하였다는 점이다. 대다수의 연구논문들은 1996년 육군에서 발행된 「육군종합사기 / 복지정책 방향」과 2008년 국방연구소에서 작성한 「2008 군인복지실태 조사」 결과를 반복하여 인용함으로써 내용이 획일적이고 독창성이 부족한 면이 있었다.

물론 군사적 측면에서 복지정책이 국방력으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각 국에서 자국의 군 복지정책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꺼리는 것도 그 이유가 될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이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소홀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인터넷을 통해 국가별 군의 복지실태에 대해 검색을 해 보면, 국가별 경제수준, 복무형태(모병제, 징병제), 근무지역(전투지역, 비전투지역) 등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채 단순히 계급별 급여 비교만을 열거하고 있고, 검증되지 않은 과거 자료들이 수많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반복 노출됨으로써 마치 우리 군의 복지수준이 타 국가들과 비교하여 상당히 미흡하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본 연구 역시 과거의 여러 자료들을 기초로 작성하였기에 내용의 한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각 국의 복지정책에 대한 개략적인 이해를 통해서 우리 군이 복지정책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60년의 오랜 혈맹관계를 유지하며 제반 군사활동 면에서 우리와 가장 유사한 면이 많은 미국과, 통일국가로 재건후 성공적인 복지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는 독일군, 그리고 중국과 첨예한 군사적 대립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대만 등 3개국의 군 복지정책에 대해 주거복지 및 수당, 가족지원 분야 위주로 간략히 살펴보았다.

비교 대상 국가들과 한국군의 객관적 수준 차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2012년도 국가별 GDP와 인구수를 기초로 비교한 결과, 미국, 독일 등 두 국가의 개인별 GDP는 우리보다 2배 가량 높은 수준이었고, 대만은 0.9배 수준으로 다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5〉 국가별 GDP 분석

(기준 : 2012년)

구 분		미 국	독 일	한 국	대 만
인 구(명)		316,668,567	81,147,265	48,955,203	23,299,716
GDP (USD)	전체	15조6,096억	3조4,787억	1조1,635억	4,804억
	개인	4,9293.2	42,869.0	23,766.6	2,0618.3
비 고		2.1:1	1.8:1	—	0.9:1

* 출처 : Naver 지식백과, 외교부 제공.

3.2.1.1 미 국

세계 최강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자랑하는 미국은 연간 국방예산만 680조원

으로 우리의 20배가 넘고, 세계 144개국에 40만여 명의 병력이 파병되어 운용되고 있는 실로 거대한 조직체로서 세계 여러 나라의 사회복지제도와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미국군은 베트남전 이후 1973년부터 지원병 제도로 변경되어 운용되고 있으며, 우수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MWR 제도⁵¹⁾를 적용하여 시행함으로써 직업군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이 제도의 기본개념은 “군인은 사회가 제공하는 생활과 동등한 삶의 질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라는 것으로, 군인과 그 가족이 민간사회의 생활과 동등한 삶의 질을 영위함으로써 전투준비태세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하고 있다.⁵²⁾

1) 수 당

현재 미국군의 급여는 아래 <표 26>과 같이 기본급여와 각종 수당으로 구성되어지는데, 민간기업의 약 1.18배 수준에 해당하는 높은 보수수준을 형성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급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비용지수(ECI : Employment Cost Index)”에서 측정된 민간 임금의 상승률을 고려하여 매년 동일 수준의 인상율을 반영됨으로써 군의 보수가 민간수준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표 26> 미국군과 한국군의 기본급여 비교

(환율 : 1061원/USD, 2013년 11월 3일 기준)

구 분	미 국	한 국	비 고
개인 GDP(2012년 기준, USD)	49,293.2	23,766.6	2.1 : 1
월 기본급여(소령 18호봉 기준)	7,283.7	2,792.3	2.6 : 1
GDP 대비	14.8%	11.7%	

* 출처 : 美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dtic.mil>) / 육군본부.(2013b). 육군예산, p.41.

51) 사기, 복지, 오락 (Morale Welfare Recreation).

52) 이성률. (2009). “직업군인의 군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건양대, p.27.

미국군과 한국군 장교의 기본급여 차이를 비교해 보면, 앞의 <표 26>에서와 같이 소령(18년차)의 경우 GDP 대비 급여수준은 3.1%로 큰 차이가 없으나, 실제 수령액은 약 2.6배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 <표 27>은 2013년 1월 기준 미국군 장교의 기본 급여이다. 표에서 보듯이 미국군은 모든 계층의 높은 보수를 보장하여 장병들의 근무 의욕을 높임으로써, 우수자원의 군내 유입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표 27> 장교 기본 급여 (미군)

(기준 : 2013년 1월)

Pay Grade	대장	중장	소장	준장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2 or less	-	-	9848	8182	6065	5056	4362	3838	3314	2876
2	-	-	10170	8563	6663	5695	5050	4348	3774	2994
3	-	-	10384	8739	7100	6090	5387	4693	4347	3619
4	-	-	10444	8878	7100	6164	5462	5116	4494	3619
6	-	-	10711	9132	7127	6410	575	5362	4586	3619
8	-	-	11158	9382	7433	6557	6110	5631	4586	3619
10	-	-	11261	9671	7473	6881	6528	5805	4586	3619
12	-	-	11685	9959	7473	7118	6853	6091	4586	3619
14	-	-	11806	10249	7898	7425	7079	6240	4586	3619
16	-	-	12172	11158	8649	7895	7209	6240	4586	3619
18	-	-	12700	11925	9089	8118	7284	6240	4586	3619
20	14975	13918	13187	11925	9530	8339	7284	6240	4586	3619
22	14975	14119	13512	11925	9781	8590	7284	6240	4586	3619
24	14975	14408	13512	11925	10034	8590	7284	6240	4586	3619
26	14975	14913	13512	11986	10527	8590	7284	6240	4586	3619
28	14975	14913	13512	11986	10527	8590	7284	6240	4586	3619
30년 이상	14975	14975	13850	12225	10737	8590	7284	6240	4586	3619

* 출처 : 美.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ilitarypay.defense.gov>).

2) 주 거

미국군은 한국군과 동일하게 관사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군에서 제공하는 관사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월 ‘기본 주택수당(BAH : Basic Allowance for Housing)’이 지급된다. BAH는 호봉과 거주하는 공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게 되며, 부양가족의 유무 및 동거여부 등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르게 책정된다.

또한 미국군은 미국 외의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장병들에게는 ‘해외 주택수당(OHA : Overseas Housing Allowance)’을 지급하며, 미국 내에서 물가가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장병들에게는 ‘가변 주택수당(VHA: Variable Housing Allowance)’ 등을 지급함으로써 주택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시켰으며, 별거 가족에게는 추가로 월 250달러의 별거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3) 가족지원

美 국방부에서는 국내 및 해외에서 근무하는 군인 자녀들의 교육여건 보장을 위하여 2007년 기준 약 250여개의 학교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군(軍) 학교가 없는 지역에서는 정부에서 학비를 지원하여 사립학교 입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아동발달 프로그램(Child Development Program)의 일환으로 취학전 아동을 위한 탁아시설과 취학연령 아동들을 위한 아동발달센터 등을 운용함으로써 양질의 보육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군인자녀 교육을 좀 더 체계화시키고 전문화시키기 위하여 국내 미군자녀 학교체제와 해외 미군자녀 학교체제를 통합한 DoDEA (Department of Defense Education Activity)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⁵³⁾

미국군의 주거시설은 기지 내에서 모든 생활이 가능하도록 시설 및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군인가족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MWR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공동체 서비스, 아동 및 청소년 서비스, 레저와 레크레이션 등 다양한

53) 김병찬·정일환, 전계논문, p.181.

세부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시행함으로써 군인가족들에게 보다 폭넓은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3.2.1.2 독 일

독일은 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춰진 나라로서 최근 지속되는 경제위기로 유럽연합 내 여러나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큰 어려움 없이 복지정책을 계속 추진해 가고 있다. 독일은 2005년 이후 ‘실업자 기초생활 보장법’을 시행하여 실업자에 대하여 매달 382유로⁵⁴⁾의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해당 거주지역의 지방자치체로부터 집세 및 난방비 전액을 지원받게 하고 있고, 실업자 및 구직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일자리 중개, 재취업을 위한 자발적 동기부여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회의 노령화 속도의 증가와 출산율 저하로 인해 향후 사회 복지구조를 지탱해야 할 세금납부자는 줄어들고 연금수령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는, 앞으로 현재의 청장년층이 연금 수령세대가 될 시기가 되면 독일의 복지 수준 역시 크게 후퇴할 수 밖에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⁵⁵⁾ 이러한 사회적 추세는 독일군의 복지정책에도 향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군은 2010년까지는 만 18세 이상 남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징병제를 적용해 왔으나, 이후 모병제로 전환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점차 병력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독일군의 주거지원은 별도 관사제도가 없으며 개인이 희망할 경우 일반주택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지원해 주고 있다. 독일군은 특별히 교육된 전문상담 인원을 배치하여 직업군인들의 정근, 이주 또는 주택구매 희망시 주택의 현지 임대가격, 기존 보육시설, 학교, 교통, 쇼핑, 문화활동, 고용시장, 의료 서비스 등 제반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시 주택마련 대부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독일군의 급여는 기본급여, 별거수당, 가족수당 등이 있으며, 이 중 별거수당은 부양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직업군인을 대상으로 월 360유로씩 지급이

54) 1EUR = 1435.96원 (2013. 11. 3 기준).

55) Pressian 기사(2013. 11. 3). “독일은 잘 나가고 있다...메르켈의 착각!”.

되고, 2주 1회 기준 가족만남 교통비를 전액 국가에서 지원한다. 또한 자녀 양육비 목적으로 자녀 1인당 월 184유로가 지급되며, 셋째는 190유로, 넷째는 215유로 등 3자녀 이상부터는 양육비가 다소 증액되어 지원되고 있다.

독일군은 미국의 MWR제도를 도입하여 68개 주둔지에 1,164개의 군인클럽을 운영하여 군 복무로 인한 각종 불이익에 대해 복지·오락 서비스를 통해 보상하고 있으며, 자녀출산시에는 모성보호를 위하여 부모 모두 출생 전 6주부터 출산후 8주까지 육아휴가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전역후 생활지원을 위하여 복무기간별로 구분하여 일반 및 전문교육을 시켜 전역후 안정된 직장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 장려금 무상지원, 대학생 등록금 무이자 대부 등 다양한 복지지원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3.2.1.3 대 만

대만의 GDP는 우리나라의 41% 수준이나 개인별 GDP는 90% 수준으로 경제력 면에서는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다. 대만은 중국군의 해상봉쇄 및 상륙을 사전에 저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군 및 공군 중심의 군사력을 육성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관계가 심화됨에 따라 최근 10년간 총정부예산의 16.1~17.4%를 국방비로 사용해 오고 있다.

대만군은 2003년부터 모병제와 징병제를 병행해서 적용하고 있으나, 2014년부터는 전면 모병제로 전환하고 간부 중심의 부대개편을 진행중에 있다.

대만군의 보수는 민간기업의 90% 수준으로서 기본급여는 세금공제가 없으며, 별거수당, 가족수당 등이 지급되고 있다.⁵⁶⁾ 대만군의 주거시설은 소요 대비 30% 정도만이 공급되고 있어 장교들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직업군인들은 자가주택을 구입하여 생활하고 있다. 정부는 자가주택 구입시 주택자금의 80%를 장기 저리로 대출해 줌으로써 직업군인들의 내집 마련을 용이하게 해 주고 있으며, 자녀의 교육여건 보장을 위해 대학교까지 전액 학비를 보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향군인회와 유사한 관병보도회에서는 산하 168개의 업체를

56) 김병찬·정일환, 전개논문, p.190.

운영하면서 직접 전역군인 취업지원 등 각종 복지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1954년 설립된 이 단체는 제대군인의 일자리 제공, 군 관련 위탁사업 등을 통해서 주로 직업군인의 전역후 여생복지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역후 본인의 사정으로 취업을 못하거나 작업능력을 상실하여 생활이 어려운 퇴역 군인들의 가족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간접적인 생활안정을 보장해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표 28〉 기타 국가의 주요 주거분야 지원제도

구 분	주거분야 지원제도
영 국	- 이사시 소요비용(법정비용 포함) 지원 - 주택정보센터 운용 : 이사시 세부 주택정보 제공
프랑스	- 주택마련 무이자 대출 - 임대보증금 대출

* 출처 : 국방부. (2009b). “군 복지현황 분석”, p.14.

3.2.2 외국군 복지정책의 시사점

3.2.2.1 제한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

주요 외국군의 복지정책에 대해 살펴본 결과, 각 나라들은 국가별 처해 있는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자국에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복지정책을 계획,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경제적 수준은 복지정책의 적용 범위를 결정지을 수 있는 결정적 요인이 되는데, 앞에서 살펴본 미국 및 독일 등 서구 선진 복지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수당 및 주거복지 관련 정책들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이정표로서의 역할은 가능하나, 현실을 냉정하게 볼 때 제한된 국방예산으로

그 정도의 수준을 따라간다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크다. 따라서 우리 군은 이러한 외국군의 사례를 비교 모델로 참고함으로써 제한된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3.2.2.2 방만한 복지예산 운영 주의

최근 독일 등 많은 서방 복지국가들도 방만한 복지 예산의 운영이 짧은 미래에 큰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무조건 퍼주기식의 복지정책이 아닌 제한적·선택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각종 예산의 절감과 예산의 무분별한 운영이 되지 않도록 깊이있는 고민과 주의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3.2.2.3 자녀교육 등 체감할 수 있는 군인가족 지원

국가별 공통 관심사항은 자녀교육에 대한 문제인 것 같다. 자녀교육 문제는 주거복지 문제와 연계되어 검토가 되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인데, 미국 군은 주거지역 내에 교육시설을 확보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고, 독일은 대학생 등록금 무이자 대부 등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학자금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대만의 경우 우리나라와 군사적 대치 상황, 경제적 수준 등 여러 면에서 비슷한 상황인데 대학교까지 군인자녀들의 학비를 전액 지원하는 것은 획기적이기조차 하다.

3.2.2.4 안정적인 주거지원 및 효율적 복지인프라 구축

사례로 제시된 모든 나라들은 직업군인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하여 주택구입 및 임대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저리의 대출 지원 등을 통해 직업군인 및 그 가족들이 주거문제의 부담을 덜어내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었으

며, 주거지역은 MWR개념이 도입된 대규모 복합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직업군인 및 가족들의 삶의 질을 격상시킬 수 있도록 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3.2.2.5 외국군 사례연구 및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마지막으로, 이번 연구를 통해 외국군의 관련 자료들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따라서 해외 무관, 교환학생, 해외문화탐방(생도과정) 등 다양한 기회를 활용하여 타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복지정책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관련 자료들을 최신화 시킬 필요가 있으며, 보안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자료들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우리 군의 주요 복지정책들의 추진경과를 적절히 홍보함으로써 국민들이 올바른 정보를 접하여 군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군의 복지정책이 선진 외국군과 비교하여 그동안 많은 차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 격차는 많이 줄어들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되어질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분한 복지예산의 뒷받침이 필수적이거나, 우리가 처한 안보현실은 복지예산의 확보를 점점 힘들게 하고 있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된 여러 시사점들을 고려하여 향후 우리 군의 복지정책 수립시 우리 군의 상황과 여건이 잘 조화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민하고, 보여주기식의 거창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복지 혜택을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군에 대한 신뢰를 더 높이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3.3 한국군 주거복지 실태 및 문제 개선 사례

3.3.1 문화적 측면

3.3.1.1 군과 일반사회와의 문화적 차이

군과 일반사회의 가장 큰 차이점은 타 조직에 비하여 군이라는 조직이 갖는 강한 폐쇄성일 것이다. 군은 유사시 국가의 안위를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며 이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담보할 수 있는 강한 정신력과 강한 규율 및 지휘체계, 정당한 명령에 대한 상명하복, 철저한 보안을 요구하는 강력한 폐쇄집단이다.

‘위국헌신(爲國獻身)’의 정신문화를 바탕으로 한 군대문화는 수많은 국가의 위기상황 극복 및 경제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어왔으나, 그 이면에는 군이 외부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그 결과 직업군인 및 그 가족들의 생활 및 의식 수준은 일반사회와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1) 결혼 및 출산

군 조직과 일반사회의 대표적인 차이로 ‘결혼 및 출산’을 예로 들 수 있다. 인구의 감소는 미래의 국방과 복지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그러나, 최근 젊은층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날로 증가하면서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2013년 통계청의 20~30대 결혼관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다음 <표 29>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미혼남녀가 결혼을 꺼리는 이유를 남자는 주택 등 결혼자금(68.0%), 취업문제(16.4%), 독신 삶 영위(12.0%) 순으로, 여자는 육아문제(38.0%), 독신 삶 영위(25.6%), 주택 등 결혼자금(20.5%) 순으로 분석하였다. 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남·녀 모두 결혼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주택 마련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느끼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는 출산에 대한 두

려움 또는 경제적 현실이 주는 양육부담이 결혼을 꺼리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9〉 결혼을 꺼리는 이유 57)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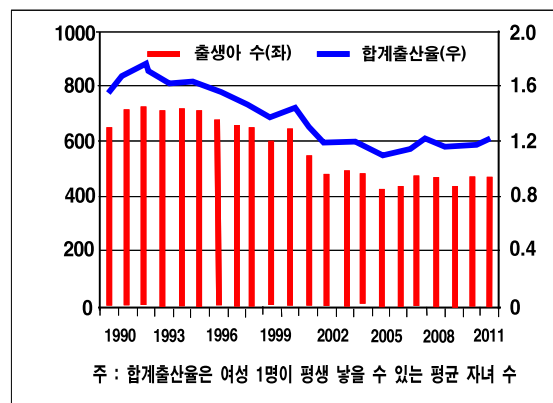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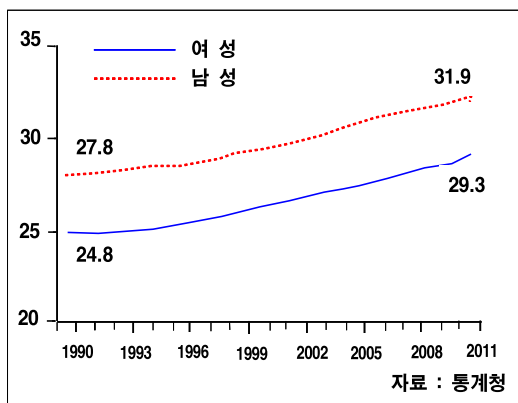
구 분	계	주택 등 결혼자금	취업문제	육아문제	독신 삶 영위	시댁처가 갈등	기 타
남 자	100	68.0	16.4	3.6	12.0	0	0
여 자	100	20.5	8.1	38.0	25.6	6.8	0.9

* 출처 : 통계청 설문조사(2013. 7. 26 ~ 8. 1), 대상 : 전국 성인남녀 1,015명.

한국남녀의 평균 초혼율은 아래 〈그림3〉과 같이 2011년 기준 남성은 31.9세, 여성은 29.1세로 지난 1990년대 초반 27.8세, 24.8세에 비하여 4년 정도 늦어진 추이를 보이고 있고, 출산율은 〈그림4〉와 같이 정부의 다자녀 정책에도 불구하고 큰 호응을 얻지 못하여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⁵⁸⁾

〈그림3〉 한국 남녀의 평균 초혼 추이

〈그림4〉 한국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 출처 : 현대경제연구원, 전게서, p.3.

57) 현대경제연구원. (2013). “20~30세대의 결혼관과 초식남·육식녀”. 「월간 경제·산업 동향보고」, p.6.

58) 현대경제연구원, 상게서, p.3.

그러나, 일반사회의 이런 추세와는 대조적으로, 직업군인의 결혼 및 출산은 보다 적극적인 면이 있다. 일반사회의 미혼남녀들이 주거에 대한 문제로 결혼을 주저하는 현상과는 달리, 직업군인들은 군에서 지원되는 주거시설이 보장됨에 따라 신혼집 마련에 대한 부담이 덜하여 주택 마련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일반 국민들에 비하여 결혼연령을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출산 부분 역시 일반 국민들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정현숙·정선영(2012)은 2009년 군인가족 6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아래 <표 30>과 같이 대상자의 55.9%가 2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고,⁵⁹⁾ 2013년 국방통계연보에서는 다음 <표 31>과 같이 여군 및 여군무원의 출산율이 타 공무원 및 전체 국민들의 출산율에 비하여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30> 직업군인의 자녀 수

구 분	계	자녀없음	1명	2명	3명	4명 이상
인원(명)	605	105	162	289	47	2
비율(%)	100	17.4	26.8	47.8	7.8	0.3

* 출처 : 정현숙·정선영, 상계논문, p.122.

<표 31> 국방여성 출산율

구 분	여성공무원	여 군	여성군무원	우리나라출산율
2010년	1.37 명	1.61 명	1.10 명	1.23 명
2011년	1.44 명	1.52 명	1.09 명	1.24 명
2012년	0.11 명	1.67 명	1.30 명	1.30 명

- 합계 출산율(TRF) : 여자 1명이 가임기간(만15세~49세) 동안 낳는 평균 출생아수

* 출처 : 국방부. (2013b). “2013 국방통계연보”, p.65.

59) 정현숙·정선영.(2012).“육군의 배우자가 인지한 군인배우자의 군인직업 특성,가족환경 특성과 복지요구도”,『한국군사회복지학』, 5(1): 122.

2) 주택 마련

군과 일반국민들은 주택마련에 대한 인식 면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2013년 5월 13일 발표한 「정부의 2012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의 최초 주택마련 시기는 2012년 기준 40.9세이며, 국민의 72.8%가 ‘내 집을 꼭 마련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전체 국민의 53.8%가 자기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이 자료에 따르면 소득별 자가 보유 비율은 2012년 기준 고소득층(상위 20%)은 64.6%, 중산층은 51.8%, 저소득층(하위 40% 이하)은 50.4%로 소득에 관계없이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고, 주거환경에 대해서는 80%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일반국민들은 아래 <표 32>와 같이 결혼 후 최초 주택구입까지 약 8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표 32> 최초 주택구입 소요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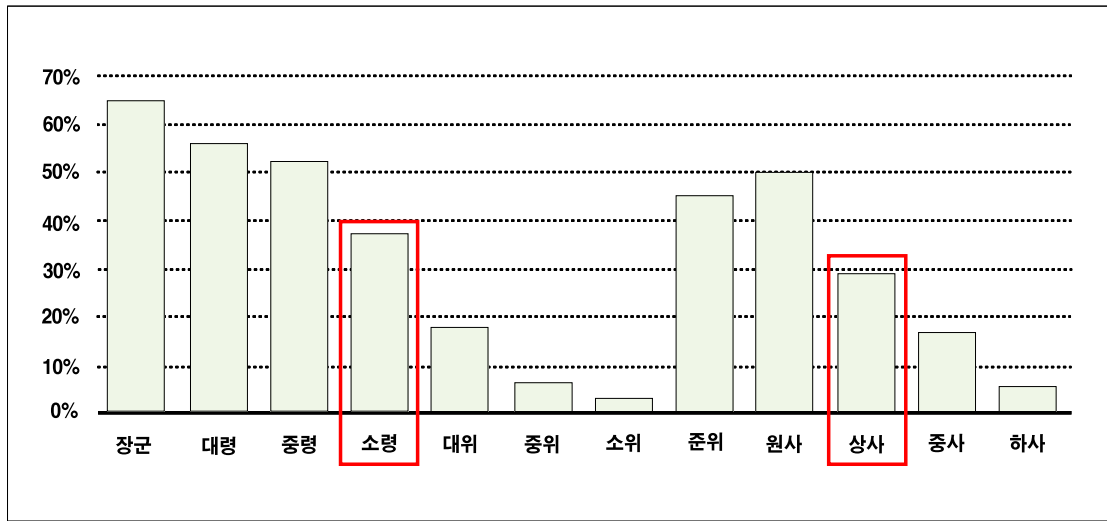
구 분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전 국	8.1 년	8.3 년	8.5 년	8.0 년
수도권	7.9 년	9.0 년	9.0 년	7.9 년

*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정부의 2012년도 주거실태 조사 결과”, p.3.

그러나, 일반국민의 결혼 및 최초 주택구입 시기(8년)를 고려시 그와 비슷한 연령대인 30대 후반의 소령 및 상사급의 주택 보유율은 다음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 기준 각각 40%, 30% 미만으로 직업군인들의 자가 마련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저조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2008년 KIDA(국방과학연구원)에서 실시한 군인복지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직업군인들이 자가를 마련하지 못하는 이유를 자금부족(50.2%), 잦은 이사로 인한 분양정보 부족(14.9%), 관사지원으로 인한 자가마련 필요성 미인식(13.4%) 등을 주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림 5〉 계급별 주택 보유율



* 출처 : 국방부. (2008), 전제서, p.65.

일반국민들의 경우 사회진출 후부터 바로 자산증식 및 안정된 노후를 준비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반면에, 직업군인 및 군인가족들이 접하고 있는 문화는 대체적으로 군인 집단주거시설에 거주함으로써 외부와의 교류 및 정보획득이 부족한 편이며, 평상시 접촉할 수 있는 주변 가족들 역시 자가 마련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낮은 분위기여서 자연스럽게 자가 구매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며 지내는 경우가 많다.

3) 경제적 인식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도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9.9%로 설명하고 있다. 반면에 정현숙·정선영(2012)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다음 〈표 33〉과 같이 군인가족의 69.2%가 2년제를 포함한 대학교 졸업 이상의 높은 학력수준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2.1%가 전업주부로서 일반국민들에 비하여 경제활동 참가율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3〉 군인 배우자의 직업

구 분	주부	군인	간호사	공무원	교사,강사
인원 (명)	417	58	13	6	31
비율 (%)	72.15	10.03	2.25	1.04	5.36
구 분	사무직	서비스업	학생	생산직	전문연구직
인원 (명)	24	13	3	2	11
비율 (%)	4.15	2.25	0.52	0.35	1.90

* 출처 : 정현숙·정선영, 전개논문, p.122.

군인가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잦은 이사로 직장 근무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며, 결혼과 동시에 기존의 직장을 포기하고 전업주부로 나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고려된다.

군인가족들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은 군에서 제공되는 급여에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직업군인들은 급여에 의존하는 제한된 수입으로 소비 위주의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국민들에 비하여 자산 증식에 대한 경제적 관념이 부족한 점은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013년 국정감사시 손인춘 의원은 직업군인들의 급여압류액이 2012년도 기준 316억원에 달하며, 제2금융권의 개인압류가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금융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일부 간부들의 불건전한 소비 문화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하였다.

경제에 대한 정보의 부재는 노후준비를 위한 예금, 적금, 보험 등의 가입 형태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다. 보험의 경우 본인에게 꼭 필요한지 여부를 따지기 보다는 함께 근무했던 동료, 친척 등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가입하였다가 단기간에 해지함으로써 금전적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으며, 다양한 금융기관의 장단점에 대한 비교분석없이 군인공제회에 집중 예치함으

로써 부실경영에 의한 심각한 문제 발생시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직업군인들은 폐쇄적인 군대문화의 특수성으로 인해 주거 및 경제에 대한 관념이 일반사회인들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는 중장기 근무후 사회로 진출하는 많은 직업군인 및 가족들의 사회적응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며, 특히 주거 및 자산의 문제는 안정적인 노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직업군인 및 가족들에 대한 적극적인 경제교육 및 정보제공을 통해 전역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뒷받침이 되어야 하겠으며, 직업군인 및 가족 역시 경제적 인식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3.3.2 환경적 측면

3.3.2.1 근무지역

201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다음 <그림 6>과 같이 행복감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 충남, 가장 낮은 지역은 전북으로 평가되었으며, 서울, 경기, 대전은 4회 이상 행복감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평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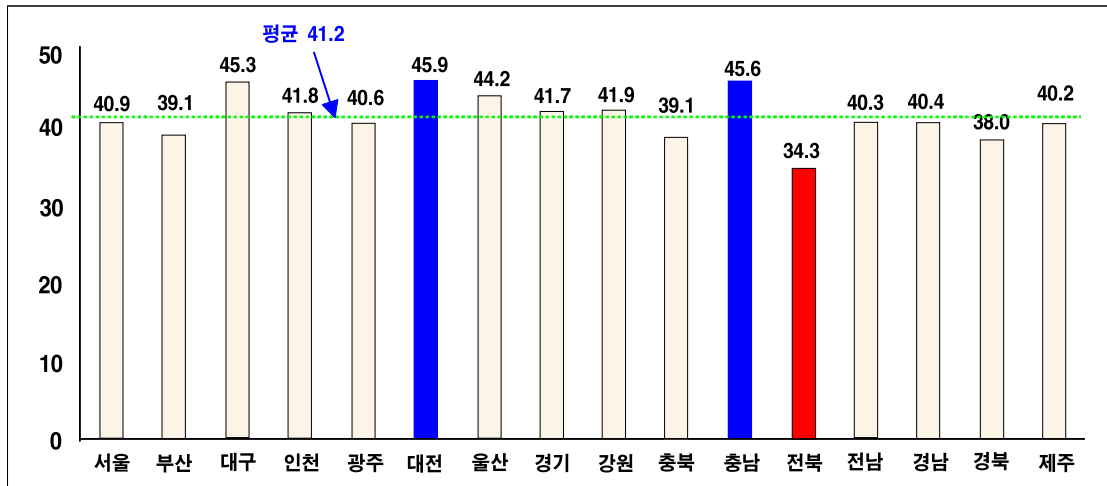
2002년 국방부 ‘국방 사기 및 복지 정책서’에서는 아래 <표 34>와 같이 직업군인들의 자가 주택 구입 희망지역을 분석하였는데, 이는 앞의 ‘지역별 경제적 행복지수’ 결과와 거의 일치한다.

<표 34> 자가 주택 구입 희망지역

구 분	수도권	대전	도청소재지	부산,대구,광주	기타
비율(%)	50.2	15.3	8.7	3.4 ~ 4.3	13.8

* 출처 : 민덕기. (2007). “직업군인 주택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p.61.

〈그림 6〉 지역별 경제적 행복지수 60)



* 출처 : 통계청, 제10회 경제적 행복지수 조사(2012. 5. 30~6. 13).

이것은 거주지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경제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교통, 복지, 환경 등의 복합적인 인프라를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런 이유는 사람들이 수도권 및 중도시를 선호하는 원인이 된다.

그러나, 직업군인은 대부분 본인의 의지 또는 희망과는 관계없이 상급부대의 명령에 의해 배치된 근무지역에서 거주하게 된다. 북한 및 주변국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은 남한 지역의 동서남북 4면 모두에 대한 경계를 요구하며, 이로 인해 직업군인 대부분의 주거지역은 30% 정도가 접경지역 및 면 소재지 이하의 취약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최근 지방자치제가 활성화 되면서 이러한 지역들도 도로망의 발달과, 각종 문화활동의 활성화, 전국적인 유통산업 인프라의 구성 등으로 과거에 비하여 생활여건이 많이 나아지긴 하였으나, 격오지역에서 거주하는 많은 군인가족들은 극장시설 등 문화적 혜택을 누릴 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은 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연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하며 지내고 있는 실정이다.

60) 현대경제연구원. (2012). “2012년 현재 누가 가장 행복한가?”, 「월간 경제·산업 동향보고」.
 - 경제적 행복지수 : 소득, 물가, 실업 등 경제적 요인 관련 주관적 만족상태를 지수화
 - 구성 : 전반적 우월감(50점) + [세부항목[(50점) = 경제적 안정 + 경제적 우위 + 경제적 발전 + 경제적 평등 + 경제적 불안].

3.3.2.2 주거환경

2013년 국정감사에서 유기준 의원은 육군 기혼간부 숙소의 부족(6%, 2,476세대) 문제와 30년 이상 노후 및 15평 이하의 협소한 숙소가 전체의 8%(3,642세대)에 이른다는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통해 군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하였다.

과거에 비하여 군인 주거시설의 이러한 문제점들은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반사회인에 비하여 잦은 이사로 사용자가 자주 바뀌고 있고, 무상으로 주거시설이 지원되면서 일반사회의 주거시설에 비하여 군 주거시설의 파손 및 노후속도는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체적으로 일반사회의 주거시설은 교육, 행정, 시장, 교통 등 복합적인 인프라와의 접근성을 강조하고, 비교적 좁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고층화, 밀집화, 주상복합화, 지하 주차공간 확보 등을 통해 주민의 생활환경의 개선과 복지를 동시에 추구하도록 설계되고 있으나, 직업군인의 주거시설은 각종 인프라와의 접근성 보다는 작전임무의 효율성을 위해 부대와의 접근성을 우선시함으로써 일반사회의 시설들과 이격되고, 비교적 넓은 부지에 지하 주차장이 없는 저층 형태의 건물로 건설되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현상들은 거주민의 시장, 학원, 교통 등 실질적인 편의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며, 지하주차장의 부재는 기상, 먼지 등에 차량을 노출시켜 부식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근 국군복지단에서 운영하는 영외 마트 및 편의매장, 지하주차장이 포함된 군 주거단지의 설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3.3.2.3 영유아 교육환경

정현숙·정선영(2012)은 군인가족 배우자들이 경제문제, 가족 건강 및 영양·주거문제, 자녀 양육문제 등에 대하여 높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군부대 전용 어린이집, 아이돌보미 서비스 등 영유아 자녀들의 교육 여건 개

선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⁶¹⁾

직업군인의 계급별 임무와 근무지역을 고려시 영유아, 초등학생 자녀를 둔 직업군인의 대다수가 전방 및 격오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교육여건이 열악한 편이다.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 2항(주민공동시설)에는 300세대 이상의 주거시설에는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2년 기준 국방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은 아래 <표 35>와 같이 총 58개소로서 실제 소요와 대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상급부대, 도심권 위주로 설치·운영되고 있어 실제 소요가 있는 야전부대에서는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는 대상자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표 35> 군 어린이집 / 유치원 현황

(단위 : 개소)

년 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27	28	28	28	29	29	31	32	36	58
어린이집	7	8	8	8	9	9	11	12	19	41
유치원	20	20	20	20	20	20	20	20	17	17

* 출처 : 국방부. (2013b), 전게서, p.92.

특히 잦은 근무지 이동은 새로 이동하는 지역에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이 운영되고 있더라도 원생의 인원 제한으로 공석이 없을 경우에는 입학이 제한되어 입학이 가능한 공석이 생길 때까지 부모가 직접 보육하거나 원거리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매번 이동할 때마다 입학비, 원복구매 등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무시 못할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

국방부는 어린이집 확충 확대를 위하여 100세대 이상 거주지역의 어린이

61) 정현숙·정선영, 전계논문, pp.133~134.

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이 방법에 대하여 군인자녀 뿐만 아니라 일반인 자녀들도 사용가능하게 함으로써 잦은 근무지 이동을 하게 되는 군인자녀들에게는 오히려 불리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어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표 36〉 국·공립 어린이집 / 직장 어린이집 비교

구 분	국·공립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대 상	만 0~5세 (1세~7세)	
규 모	11명 이상	5명 이상
운 영	• 군 : 무상으로 시설 제공 • 지자체 : 시설 운영	• 군 직영, 외부 전문기관 위탁
장 점	• 시설운영 부담 없음(지자체예산) • 민간의 우수한 보육기관 이용 가능	• 보육 만족도 최고 (2009년 보육실태 조사 결과) • 군 가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보육 가능 • 보육시설 직접 관리·통제 가능 - 영아반(만 0~1세) 운영 - 군 가족 보육교사 활용 등
단 점	• 민간어린이(50%) 보육으로 대기인원 발생 심화 • 지자체 시설운영으로 군의 보육시설 관리·통제 어려움 - 영·유아반(만 0~1세) 운영 기피시 통제 곤란 - 군 가족 보육교사 채용 등 •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보육의 질 저하 우려	• 시설운영 부담(국방예산) * 어린이집 1개소 당 3~4억원 소요 (’12년 예산 77억원, ’13년 111억원) → 어린이집 100개소를 직장으로 운영시 400억원 정도 소요

* 출처 : 국방부. (2013c). “군 어린이집 설치운영 개선 방안 토의자료”.

3.3.3 사기 및 복지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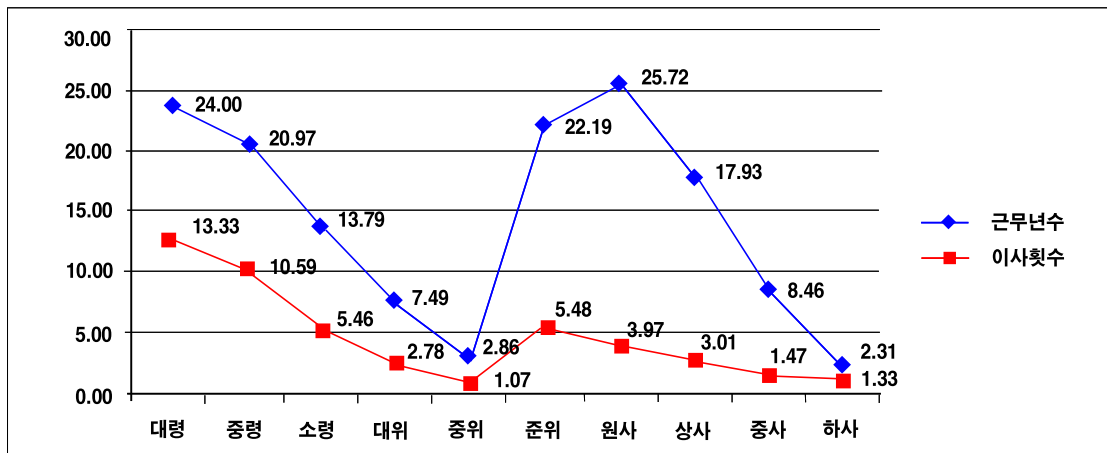
3.3.3.1 이사가 미치는 영향

1) 잦은 이사와 경제적 부담

국토교통부는 「2012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서 일반국민들의 평균 거주기간을 자가의 경우 12.5년, 임차의 경우 4.2년으로 발표하였다.⁶²⁾

이에 비하여 군인의 거주기간은 아래 <그림 7>과 같이 계급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영관급은 평균 2년, 위관은 2.7년, 준사관은 4.1년, 부사관은 5.6년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일반국민들의 임차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장교들의 경우는 2배 이상 이동횟수가 많으며, 준사관은 비슷한 수준, 부사관은 오히려 이동횟수가 적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7> 계급에 따른 근무년수와 이사횟수



* 출처 : 정현숙·정선영, 전개논문, p.123

일반국민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이사횟수가 빈번한 장교들의 경우 타 계층들보다 삶의 질 측면에서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이사화물비용은 개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소폭 인상되어 2013년은 다음 <표 37>과 같이

62) 국토교통부, 전개서, p.2.

거리별 실비를 적용하여 지급되고 있으나, 아래 <표 38>과 같이 1회 이사시 실제 사용되는 평균 이사비용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이는 고스란히 개인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 37> 육로수송임 지급 기준

(단위 : 만원)

구 분	40km 이하	41 ~ 80km	81 ~ 120km	121~ 160km	161~ 200km	201~ 240km	241~ 280km	...	481km 이상
수송임	60	76	86	96	104	110	116	...	153

* 출처 : 국방부. (2012c). 국방부훈령 제1899호 이사화물수송임 지급훈령

<표 38> 이사비용

(단위 : 만원)

구 분	계	이사 차량 / 인력사용	도배 / 장판교체	설치이전	자녀전학	가정용기기 교체	기타
평 균	261.64	81.24	48.53	23.63	15.21	74.66	18.37
장 군	260.57	114.46	48.54	27.35	15.95	44.49	9.78
영 관	228.83	92.43	35.43	19.52	20.11	44.58	16.76
위 관	181.02	78.14	37.44	16.69	5.38	35.09	8.28
준사관	314.32	78.83	60.48	26.35	22.78	108.49	17.39
부사관	297.86	75.84	57.35	27.66	14.94	99.22	22.85

* 출처 : 국방부. (2008), 전게서, p.66.

이사가 잦은 장교들의 경우 상당수가 이러한 개인부담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도배, 장판 등을 교체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거나 저가의 제품

을 사용하고 있고, 잦은 이사로 인해 가구 및 가전제품의 손상이 심하나 제품의 구입 및 교체에 소극적이며 반영구적 제품보다는 비교적 단기간 사용후 버려도 부담없는 저가형 제품들을 구매하여 사용함으로써 일반국민 수준의 쾌적하고 아늑한 환경을 누리지 못하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

2) 별거기간

직업군인들의 별거는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들 모두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를 주는 원인이 된다. 별거가 주는 영향에 대하여, 문채봉·최광현(2012)은 별거기간이 길어질 경우 가족들에게 비교적 장기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⁶³⁾ 양명숙·이규서(2003)는 일정기간 아버지의 역할이 상실된 상태에서 아버지와 별거로 인한 결손가정의 현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난다고 기술하고 있다.⁶⁴⁾

KIDA의 「2008 군인복지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혼 군인의 30.7%가 가족과 별거 중에 있으며 이는 사회통계 별거율(21.2%) 보다 약 1.5배 높은 수준이다. 배우자와의 별거 이유로는 다른 지역 근무(53.9%), 자녀돌봄으로 인한 타지역 거주(36.5%) 등을 주된 이유로 분석하고 있으나,⁶⁵⁾ 아래 <표 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거시설의 부족(72.0%)이 더 큰 원인임을 알 수 있다.

<표 39> 입주 지연 사유

구 분	계	숙소부족	도배,장판,시설 수리 등	이전 거주지 전세/매매 미해결	기 타
비율(%)	100	72.0	5.2	1.7	21.0

* 출처 : 국방부. (2008), 전제서, p.59.

63) 문채봉·최광현. (2012). “군 가족의 별거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전략”, KIDA, pp.3~4.

64) 양명숙·이규서. (2003). “청소년기 군인자녀의 환경적 특성이 인생태도와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학회지」, 12(4):450.

65) 국방부. (2008), 전제서, p.43.

군에서 지원 가능한 주거시설의 부족은 근무지 이동후 이사를 희망하는 많은 직업군인 및 가족들이 입주 가능할 때까지 일정 기간 별거생활을 강요하는 원인이 된다.

「2008 군인복지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래 <표 40>과 같이 주택의 형태에 따라 입주시까지 대기기간이 일부 차이가 있으나, 3개월 이상 이사를 하지 못하여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사례가 31.3%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영관급 장교들이 평균 2년 간격으로 이사하고 있는 점을 고려시 직업군인 및 가족들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광현(2012)은 가족이 있는 군인들이 독신 군인보다 이사에 따른 적응에 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⁶⁶⁾ 아래 <표 40>은 근무지 이동후 기혼 직업군인들의 70%가 곧바로 입주하지 못하고 독신숙소 또는 기타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재정지역의 독신숙소 부족 현상은 타 지역에 비하여 더욱 심각하여 이사를 하지 못한 많은 기혼 군인들이 타 동료의 방 또는 원룸, 고시원 등에서 임시로 생활하거나, 기존의 주거시설에서 수십 km 떨어진 거리를 출퇴근하는 등 상당한 불편 및 부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며 지내고 있는 실정이다.

<표 40> 부대 이전후 입주까지의 대기기간

(단위 : %)

구 분	바로 입주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1년 이내	2년 이내	2년 이상	종 합	
							3개월 이내	3개월 이상
평 균	30.0	38.8	12.3	7.9	2.6	8.4	68.6	31.3
관사 (군자체, BTL 등)	35.9	37.5	12.3	5.8	2.3	6.1	73.4	26.6
민간아파트 매입관사	24.1	40.0	12.3	10.0	2.9	10.7	64.1	35.9

* 출처 : 국방부. (2008), 전제서, p.59.

66) 최광현. (2012). “군인의 잦은 부대이동이 가족들에게 미치는 영향”, KIDA, p.3.

3.3.3.2 복지 및 편의시설

장선정(2012)은 주민들에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근린시설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거주민들은 대형마트, 종합병원 등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편의시설이 주거지와 근접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표 41〉 필요 근린시설 (고양, 파주, 포천)

구 분	대형마트	도서관	종합병원	교육시설	공 원 (놀이터)	스포츠 센터	기타
일반인(%)	39.3	14.8	23.0	8.1	3.7	9.6	1.5
군 인(%)	21.2	3.4	24.5	21.6	8.4	20.6	0.4

* 출처 : 장선정, 전개논문, p.92.

근무지역의 특성상 읍·면 단위 이하의 취약지역에서 거주하는 대다수의 군인가족들은 편의제공을 위해 설치된 영외마트(P.X)와 편의매장, 농협·축협 등 중소 마트와 재래시장을 주로 사용하고 있어 다양한 물품의 선택이 제한되며, 주기적인 중·대도시 대형마트 이용을 통해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국군복지단에서는 군인가족들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계룡대(계룡), 자운대(대전), 상무대(장성), 두미르(춘천) 등 7개소 지역에 대형쇼핑타운을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 중·대도시 지역의 상급 및 교육부대의 주거지역 위주로 설치되어 있어 대다수 군인가족들이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군인아파트 단지에 설치되어 운영중인 영외마트(P.X)는 시중 가격보다 비교적 염가로 판매되고 있어, 주변 식당 등 일반인들의 사용이 크게 증가하여 군인가족들의 사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에서는 주변 중소상인들의 상권을 위협한다는 불만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부대별 운영하고 있는 복지회관은 식당, 목욕탕, 노래방, 골프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군인 및 가족들의 생활 속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주민과의 유대관계 활성화를 위해 부대 주변의 원주민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 사용을 개방하는 부대가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다.

3.3.3.3 군 주거지원 실태

1) 입주 관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때에 이사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거시설의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확인하였다. 실제 2013년 현재 군 주거시설은 소요 대비 94%의 보유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부족한 소요에 대해서는 전세 및 내집 마련 지원 등의 방법을 통해 해소하고 있다. 그러나 근무지 이동과 맞추어 주거지원이 제때에 되지 않고 지연되는 이유를 단순히 주거시설의 부족으로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첫째, 군 주거시설은 한 세대에 한 집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거지 이동시 인트라넷의 국방인사정보체계를 활용하여 변동 여부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부대에서는 실무자의 확인 및 관심 소홀로 거주자의 변동여부가 제때 확인되지 않아 한 세대가 복수의 군 관사를 음성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식별된 바 있고, 독신간부가 부모와 함께 거주한다는 명목으로 기혼자 시설을 배정받은 후 혼자 거주하는 사례, 근무지 이동시 실무자의 확인 및 통제 없이 임의로 주거시설을 인수인계하여 사용하는 사례 등 다양한 비정상적인 사례들이 자체감사를 통해 식별된 바 있다. 이상의 사례들은 모두 주거시설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실무자의 확인·관심이 소홀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서 약간의 관심과 확인 시스템만 보완한다면 개선이 가능하다.

둘째, 부대별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 ‘입주 우선 순위의 기준’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물론 부대별 지역 및 임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 우선순위의 기준을 선정하여 적용할 수는 있겠으나, 다음 <표 4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부대별 입주 기준의 차이가 많아 동일 시기에 부대를 이동하더라도 부대별 입주 가능 시기가 달라지게 됨으로써 주거시설의 원활한 순환을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

셋째, 부대별 주거시설 배정시 가족 수 보다는 계급 및 직책을 우선하여 주거를 배정하고 있다. 군 주거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사단급 이상 제대의 부대에서는 통상 넓은 면적의 주거시설을 참모용으로 별도 확보하여 관리한다. 그러나, 자가를 마련하여 별거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관례적으로 넓은 면적의 시설을 배정하는 사례가 있어, 상대적으로 계급이 낮은 계층의 미입주자들에게 불만이 되고 있다. 또한 장교용과 부사관용을 구분하여 운영함으로써 공가(空家)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상의 차이를 두어 배정하지 않아 장기간 입주대기 상태가 지속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표 42〉 부대별 입주 우선 순위

구 분	입 주 우 선 순 위
A사단 (전방)	① 지휘관(대급 이상) ② 부모 봉양, 다자녀(자녀 3인 이상) ③ 전입순 ④ 동일계급 2인 이상일 경우(주요직위자 우선 배정/심의에 의거) ⑤ 특수근무자, 기타 사유로 긴급히 입주가 필요한 경우
B사단 (전방)	① 주요직위자 ② 작전 및 상황근무 ③ 심의간 지정된 고충간부 및 지원부대 신청자
C사단 (후방)	① 자녀 3인 이상 ② 장애 군가족 부양 간부 ③ 기혼자로 부모 공양자 ④ 2명 이상의 성별이 다른 자 ⑤ 동일자격시 입주신청일자(전입일 기준)

* 참조 : 육군 인트라넷 (사단별 홈페이지).

2) 주거시설(APT)의 구조적 문제

김민수(2012)는 국방·군사시설기준에 의해 적용되고 있는 60~70㎡의 군 관사 시설에 대하여 주거공간이 가족의 특성과 수요자의 요구수준이 반영되지 않아 공간의 크기는 증가되었으나 효율적인 면적사용은 제한된다고 기술하고 있다.⁶⁷⁾

67) 김민수. (2012). “후방지역 군인 복지 주거단위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 홍익대, p.14.

국방·군사시설기준에 의해 설계된 군 주거시설의 경우 면적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구조의 배치가 거의 변화가 없으며 거실, 방, 화장실 등의 면적이 조금씩 넓어지는 형태로만 구성되어 있어 전반적인 공간활용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편이다. 최근 설계되고 있는 민영아파트의 경우 주부들이 주로 사용하는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가전제품들의 설치공간을 별도로 계획하고 벽체를 활용한 수납공간을 최대한 설치함으로써 주부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군은 이러한 일반적인 가전제품들의 배치공간이 고려되지 않고 있고 수납공간 역시 충분치 않아 공간의 효율적 사용이 제한되는 실정이다.

또한 정수기, 비데, 전기레인지, 전기오븐, 커피포터 등 일반 가정집에서 평상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전기제품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전원연결을 위한 콘센트가 적시적소에 구비되지 않아 별도의 연장선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등 사용자 입장에서의 꼼꼼한 배려가 부족한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방의 크기 역시 큰 불편요소 중 하나이다. 현재 일반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군인아파트는 방 3개, 거실 1개의 형태로 구성 면에서는 민영아파트와 큰 차이가 없으나, 현재의 방 구조는 사용자의 신장과 책상·책장 등 가구 비치 등을 고려시 침실로 사용하기 힘들 정도로 공간이 좁아 공간의 활용성 보다는 기준 수량의 확보에만 신경을 쓴 것 같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그러나 민영아파트의 경우에는 좁은 면적에도 불구하고 단열보온창의 설치, 발코니 확장 등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시 군의 표준설계도도 사용자의 요구와 공간의 효율성을 최대한 만족시킬 수 있도록 보완될 필요가 있다.

3) 군인공제회와 내 집 마련 지원 실태

군인 및 군무원들로 구성된 회원의 급여저축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군인공제회는 막대한 현금자산을 바탕으로 부동산 및 기업 인수합병 등 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방부와 연계하여 직업군인의 내집 마련 지원활동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군인공제회에서는 군인들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일반분양과 비교하여 5~10% 저렴한 가격으로 회원들에게 분양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회원급여 저축은 복리를 적용함으로써 장기 가입 회원들에게 목돈을 제공하는데 기여하고 있어 많은 직업군인 및 가족들이 군인공제회에 저축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러나, 군인공제회에서 제공되는 특별분양은 비교적 저가의 제공에도 불구하고 직업군인들이 부담하기에는 다소 큰 비용으로 제공되고 있어 실제 그 혜택을 누리는 대상이 그다지 많지 않은 실정이고, 일반은행 저축과 달리 경영문제로 인한 심각한 손실 발생시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성은 비교적 군인공제회 회원급여저축에 의존하고 있는 상당수의 직업군인들에게 치명적 위협을 줄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

실제로 2011년 국방위원회 정의화 의원은 2002년 이후 군인공제회가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한 자금 2조6천536억원 중 92%에 해당하는 2조4천375억원이 미회수되고 있어 향후 군인공제회의 전체적인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고,⁶⁸⁾ 지난 2013년 7월에는 PF대출금에 대한 시행사의 자금 횡령으로 2,700억원의 부실채권을 떠 안게 되는⁶⁹⁾ 등 부실경영의 모습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나, 이러한 현상에 대한 직업군인들의 관심 및 문제인식은 다소 낮은 편이다.

「2008 군인복지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업군인의 상당수가 주택마련시 부족 금액 대출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3〉 주택 자금 마련시 겪었던 어려움

구 분	계	분양정보 부족	저축액 부족	대출에 대한 부담	주택마련지 선정 애로	기타	어려움 없었음
비율(%)	100.0	10.7	33.4	34.2	14.6	3.9	3.2

* 출처 : 국방부. (2008), 전제서, p.67.

68) 연합뉴스(2011. 7. 17), “군인공제 부동산사업 ‘부실’..미회수금 2조4천억”.

69) 머니투데이(2013. 7. 18), “군공 PF 대출, 청구 인수자금 전용 논란”.

* PF대출(Project Financing) : 특정 프로젝트의 사업성(수익성)을 평가하여 돈을 빌려주고 사업이 진행되면서 얻어지는 수익금으로 자금을 되돌려 받는 것.

부족 금액의 대출은 대부분 군인공제회 또는 일반은행 등에서 대출을 통해 마련하게 되는데, 최근 군인공제회의 대출금리는 일반 시중은행의 금리와 비교시 아래 <표 44>, <표 45>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그다지 큰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일반은행의 경우는 2년간 무이자 대출 등 사용자 혜택의 범위를 넓히고 있어 일반은행에서의 대출을 선호하는 추세이다.

<표 44> 은행별 가계 대출 금리(평균)

(기준 : 2013. 8월, 금리 : 년 %)

은행	국민	기업	농협	산업	수협	신한	외환	우리	하나	한국씨티
분할상환	3.62	3.57	3.90	4.00	5.61	3.76	3.91	3.96	3.78	3.51
일시상환	3.76	3.68	4.13	3.81	4.86	4.12	4.00	4.19	3.99	3.48

* 출처 : 전국은행연합회(<http://www.kfb.or.kr>), 은행금리비교.

<표 45> 군인공제회 생활자금 대여 적용 금리(회원대여)

(기준 : 2013. 10. 19, 금리 : 년 %)

상환방법	기간	신한	씨티		우리	보증대여 (씨티)
			'13. 6. 17 이전	'13. 6. 18 이후		
원금균등	1 ~ 5년	3.56	4.52	3.64	3.53	4.52
	6 ~ 10년				3.68	
원금일시	1년	3.56	4.52	3.64	3.53	-

* 출처 : 군인공제회(<http://www.mmaa.or.kr>), 적용금리비교.

따라서 군인공제회는 부실경영이 회원의 경제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투명한 운영이 되도록 하고, 회원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을 통해서 서로가 Win-Win할 수 있는 경영의 변화가 요구되며, 직업군인들 역시 방관자적 입장이 아니라 주인의식을 갖고 다양한 요구조건을 제공함으로써 혜택의 범위를 넓혀 나가야 할 것이다.

4) 전세자금 지원

국방부는 주거지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래 <표 46>과 같이 지원금액을 증가시켜 나가고 있다.

<표 46> 군 간부 전세대부 현황

(단위 : 억원)

년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금액	349	467	453	614	640	567	738	971	1,009	1,167

* 출처 : 국방부. (2013b), 전제서, p.96.

그러나, 2013년 10월 부동산써브 제공 자료에 의하면, 서울지역의 아파트 118만 3,738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셋값 2억원 미만의 주택이 30.53%로 2008년 62.15% 대비 절반 이상 급감하는⁷⁰⁾ 등 최근 부동산 대란의 영향으로 전세가격이 급격하게 인상되고 있는 추세이다.

2013년 국정감사시 유기준 의원은 아래 <표 47>과 같이 군의 실(實) 전세자금과 현(現) 지원금액을 비교하여 전세자금의 현실화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표 47> 전세자금 비교

구 분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5급지
實 전세자금	2.3억원 (서울)	1.5억원 (수원)	1.2억원 (용인)	1.2억원 (계룡)	
現 지원금액	1.4억원	9천만원	6천만원	5천만원	
비고(개인부담)	+9천만원	+6천만원	+6천만원	+7천만원	

* 출처 : 2013년 국정감사 질의자료(유기준 의원)

70) Daum 부동산(2013. 10. 16), “사라지는 2억 미만 전셋집”.

앞의 자료에 의하면 군에서 지원되는 전세자금은 급지별로 차이가 있으나, 실 전세자금의 42~60% 수준으로, 나머지 부족금액은 개인의 부담을 요구한다. 개인 부담금액은 아래 <표 48>과 같이 은행별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적용시 매월 20만원~34만원의 추가 지출을 발생시키나, 현재 지급되고 있는 주택수당(8만원)은 1995년 이후 18년째 동결되어 있어 적정수준으로의 조정이 요구된다.

<표 48> 전세자금 대출 금리

(기준 : 2013. 10. 11, 단위 : %)

은 행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씨티	외환	우리	하나	경남
보증 비율	90%	4.20	4.19	4.38	3.90	3.92	4.14	4.28	4.38	4.58
	100%	4.27	-	-	-	-	-	4.35	-	-

* 출처:한국주택금융공사(<http://www.hf.go.kr>), 전세자금대출 금리 상세조회.

5) 민간투자방식(BTL)

민간투자방식(BTL : Build-Transfer-Lease)이란 민간 사업자가 사업시설을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소유권을 이양하고 국가로부터 시설 임대료 및 운영비를 지급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을 의미한다.⁷¹⁾

국방부는 노후 시설물의 개선을 위하여 재정사업 이외에 BTL방식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박인규(2012)는 BTL방식에 대하여 시설의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20년간 원금과 이자를 분할상환하고 시설관리에 소용되는 비용 역시 매년 지불하도록 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⁷²⁾

71) 국방부. (2012b), 전게서, p.219.

72) 박인규, 전계논문, p.52.

이는 곧 원금 및 이자의 분할상환이 종료되는 2030년까지 국방비의 지속적인 지출을 의미하며, 향후 재정부담으로 인해 다른 사업의 축소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BTL아파트의 경우 관리업체 협약서에 의해 업체에서 직접 관리비를 운영하며, 입주자는 타 유형의 아파트에 비하여 다소 높은 관리비를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BTL은 단기적으로 주거환경의 개선 면에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인 면에서는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향후 관련사업을 추진시에는 비용 대비 효율성을 면밀히 검증함으로써 국방재정 운영의 경직성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하겠다.

3.3.4 한국군 주거개선 사례

지금까지 한국군의 주거복지 실태에 대하여 문화, 환경, 사기 및 복지 측면에서 간략히 알아보았다. 우리 군은 안정적인 주거복지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으나, 많은 부분에서 보완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런 측면에서 2003년 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 부분에서 본상을 입상한 두미르 아파트의 개선 사례와, 지난 2011년 부대를 이전한 학생중앙군사학교의 주거개선 사례를 통해 우리 군의 주거복지 개선을 위한 최신 근황에 대해 간략히 확인해보고자 한다.

〈그림 8〉 두미르 아파트 및 문무 아파트 전경



3.3.4.1 두미르 아파트

두미르 아파트가 타 주거시설과 가장 차별화되는 것은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을 해치지 않고 적극 활용했다는 점일 것이다. 이 아파트는 호수변에 위치한 천혜의 조건을 훼손하지 않고 부드러운 곡선형의 건물배치를 통해 일조와 소양호에 대한 조망을 가능하도록 하였고, 주차장을 지하로 설치하여 단지의 내부 중심 공간을 적극적으로 조정하여 공원화함으로써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입주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단지 내에 위치한 복지센터(두미르 쇼핑타운)에는 영외마트, 실내골프장, 목욕탕, 헬쓰장, 식당, 에어로빅 학원, 볼링장(6레인)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단지 주변에는 복지회관, 인형극장, 산림박물관 등 다양한 복지 및 문화시설들이 위치하여 입주민들에게 최상의 만족을 제공하고 있다.

기존의 군인 주거시설들이 부대별 소규모로 도심과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 많은 불편을 주어진 것과 비교하여, 이 아파트는 도심 및 외부로의 진출입이 용이한 지역에 복지 및 편의시설이 구비된 대규모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거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였으며, 환경 디자인 면까지 조화롭게 설계함으로써 주변의 어느 민영시설에도 뒤지지 않도록 군 주거시설의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3.3.4.2 문무 아파트(학생중앙군사학교)

문무아파트는 2011년 11월 학생중앙군사학교가 경기도 성남에서 현위치(충북 괴산)로 이전하면서 조성된 주거단지로서, 기혼 및 독신간부 주거시설, 복지회관, 체육시설, 어린이집 등을 한 곳에 집중시켜 거주민의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이 아파트 단지는 괴산지역 주민 밀집지역의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으나, 다음 <표 49>와 같이 마트, 재래시장, 병원, 학교시설들이 비교적 근거리에 위치하여 도보 이용이 가능하며, 학생중앙군사학교와의 거리 역시 5km 내외로

출퇴근시 접근성이 양호하였다.

〈표 49〉 주요 시설과의 이격거리

구 분	마트 / 재래시장	병원시설	초등학교	중학교
거 리	2km	0.7 ~ 2.5km	0.6km	0.8km
비 고	4개소 (차량 3분, 도보 15분)	16개 (종합병원 : 2, 보건소 : 1, 기타 : 13)	도보 5분	도보 8분

기혼자의 주거시설은 97㎡, 115㎡ 두가지 형태로 8개동 178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주보증금은 5급지를 적용하여 각각 180만원, 210만원으로 타 지역에 비하여 비교적 저렴한 수준이다.

단지 내에 설치된 복지회관에는 목욕탕, 스크린골프장(18홀), 객실, 식당, 노래방 등의 편의시설이 구비되어 민간시설과의 접근성 제한에서 오는 거주민의 불편을 해소시키고 있으며, 단지 내에 설치된 테니스장(2면) 및 풋살장(1면), 학교 내에 설치된 52석 규모의 골프연습장 등 거주민들이 누릴수 있는 다양한 체력단련 시설들을 제공하고 있다.

군인가족들에게 가장 큰 고민요소 중의 하나인 교육환경은, 도보 이동거리에 초등학교 및 중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아파트단지 내에 영유아 교육을 위한 직장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보육료를 제외한 일체의 비용을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어 부모의 양육 부담을 크게 감소시켜 주고 있다.

〈표 50〉 문무 아파트 직장어린이집 현황

구 분	정 원	시 설	교 사	운영시간
거 리	5개반 / 37명	보육실(4), 유희실, 모래놀이터, 실외놀이터, 북층도서관	원 장, 교사 5명	07:00~19:30

Ⅳ. 직업군인 주거복지 정책 개선방안

4.1 현안 문제 해결 방향

국방부는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부합된 국방시설의 현대화와 안보·환경·사회가 조화롭게 발전하는 녹색기반의 정착이라는 중점 하에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직업군인의 노후된 주거시설을 2017년까지 국민주택 수준으로 100% 확보하기 위해 아래 <표 51>과 같이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51> 군 관사 개선을 위한 재원 소요('13 ~ '17 국방중기계획)

(단위 : 세대, 억원)

구 분		총 소요	보유	'12년	대 상 기 간					
					'13	'14	'15	'16	'17	계
계	물량	71,891	71,524	367	1,548	2,030	2,658	2,661	3,292	12,189
재 정	물 량	소계	48,819	48,452	367	1,548	2,030	2,658	2,661	12,189
		건립	29,930	29,930	-	617	439	518	401	2,454
		리모델링	-	-	-	0	161	275	234	846
		매입	12,431	12,431		465	676	837	681	3,442
		전세	6,458	6,091	367	466	754	1,028	1,345	5,447
	예산		-	-	632	1,031	1,418	1,319	1,543	6,712
BTL	물량	21,781	21,781	-	-	-	-	-	-	-
재정외	물량	1,291	1,291	-	-	-	-	-	-	-

* 총 소요 : '12년 군 간부정원을 적용한 소요(국정과제 확보목표 물량).

* 전세 물량 : 기금 간 전출금(복지기금)에서 산정.

* 출처 : 국방부.(2012d).“13~17 국방중기계획 시설분야 정책회의록”, p.11.

국방부는 앞의 <표 5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민간매입과 전세 물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주거시설의 부족물량을 해소시키려 하고 있으나, 이미 확보한 시설 중에서도 30년 이상 노후에 따른 교체소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건립 및 리모델링 등의 소요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을 고려시 앞서 설명한 BTL사업 및 민간매입에 의해 확보된 주거시설 역시 향후 시설 노후에 따른 유지관리가 큰 문제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세물량의 증가 역시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난을 고려시 그 방법의 적절성 부분이 신중하게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방부는 군 주거시설의 ‘건립’과 ‘매입’의 상호 경제성에 대해 비교한 결과 ‘매입’이 더 경제적이라는 판단을 내린바 있으나, 여기에는 인구의 변화 추세 등 향후 변수가 고려되지 않은 큰 문제점이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아래 <표 52>와 같이 미래년도의 가구원수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2035년에는 3인 미만의 가구수가 87.7%로 대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표 52> 가구원수별 추계가구(2035년)

(기준 : 전국)

구 분	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이상
가구수	22,260,603	7,628,065	7,578,969	4,317,612	2,189,530	425,582	95,210	25,635
비율(%)	100	34.3	34.0	19.4	9.8	1.9	0.4	0.1

* 출처 :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그러나 지금까지의 각종 연구논문 및 국방부 계획들은 향후 미래의 주거시설 소요와 유지 관리 부담에 대한 고려가 다소 소홀한 면이 있으며, 현재 거주자들의 편의 및 요구만을 중시함으로써 넓은 면적의 건물을 확보하는데 치중한 면이 있어 건물 면적의 적절성 역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직업군인의 주거지원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주거지원 방법 및 예산, 주거환경 및 교육, 주거시설의 관리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4.2 주거지원 방법 및 예산 측면

4.2.1 직업군인 자가(自家) 보유율의 증가

4.2.1.1 자가 보유의 필요성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경기의 침체현상은 무주택자들의 생활안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특히 이 문제는 자가(自家) 보유율이 일반국민들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직업군인들의 향후 주거안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은행 KB부동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전국의 전세가격은 43.5%, 수도권은 45.2%가 각각 상승하였으며, 이는 동일기간 소비자 물가상승률(17.5%)과 비교하여 2배를 넘는 수치이다.⁷³⁾

〈그림 8〉 최근 10년간 주택 전세가격 종합지수 분석(전국)



* 출처 : 한겨레뉴스(2013. 11. 21).

73) 한겨레뉴스(2013. 11. 21). “지난 10년 전셋값 얼마나 올랐나 살펴보니...”.

한국은행은 지난 2013년 6월말 기준 세입자의 전세자금 대출이 2009년말 (33조5천억원)과 비교하여 3년 반만에 60조원을 초월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⁷⁴⁾ 시중은행들은 수익성 개선을 위해 대출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⁷⁵⁾시킴으로써 가계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무주택자들의 향후 주택 마련을 더욱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며, 소득의 대부분을 급여에 의존하는 많은 직업군인들의 경우 주택마련이 사실상 힘들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군에서 무상지원되는 주거시설을 장기간 사용하며 자가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지내온 직업군인들의 경우 주거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전역·퇴직할 경우 퇴직금 및 저축액의 대부분을 주거마련을 위하여 사용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최근의 전세물량 부족현상 등을 고려시 주거문제는 생활의 안정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직업군인들이 군 복무기간 중 자가(自家)를 마련할 수 있도록 확실한 동기부여가 요구되며, 적절한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부담을 최소화 함으로써 전역 및 퇴직후에도 안정된 주거여건이 보장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4.2.1.2 자가 보유 증가를 통한 기대효과

직업군인들이 자가 보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잦은 이사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 해소

직업군인들의 잦은 이사는 군에서 이사화물비용이 지원되고 있으나 추가적인 비용지출을 요구하여 경제적 부담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특히 장교들의 경우 근무지 이동에 따라 평균 2년 주기로 이사를 하여 타 계층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느끼며 지내고 있는 실정이다.

잦은 이사는 이사 전까지 상당기간 가족과의 별거를 강요하여 추가적인 생활비의 지출을 발생시키며, 매년 이동시마다 발생하는 영유아 자녀의 입학비,

74) 연합뉴스(2013. 11. 1), “집주인 4명중 1명 전세 올려 빚값아..깡통전세 36만개”.

75) 매일경제(2013. 11.21), “수익 나빠진 은행 대출금리 속속 올려”.

교재 및 원복 등의 비용 역시 만만치 않은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

자가의 마련은 이러한 경제적 불이익을 어느정도 해소시킬 수 있으며, 물가의 상승 및 부동산의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고려할 때 자산증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물론 자가를 마련할 경우 현지에서 정착을 하게되고, 이것은 가족간의 별거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으나, 자의(自意)에 의한 별거와 타의(他意)에 의한 별거는 엄연히 구분시킬 필요가 있으며, 제도적으로 별거 가족에 대한 주기적인 상봉 여건을 해소시켜 준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직업군인 배우자의 경제참가율 향상

정현숙·정선영(2012)은 직업군인 배우자의 69.2%가 2년제 대학 이상의 높은 학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72.1%가 전업주부인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 잦은 이사는 직장에서의 계속 근무를 제한시키고, 의지와는 다르게 기존의 직장을 포기하거나 취업이 되더라도 능력수준보다 낮은 조건으로 취업을 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⁷⁶⁾

그러나, 자가의 마련은 특정 지역에 정착하게 함으로써 직업군인 배우자의 다양한 직장 선택 폭이 보장되어 개인적으로는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사회적으로는 우수인력의 사장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 지속적인 인적(人的) 네트워크 구성

잦은 이사는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할 때마다 기존의 혈연, 학연, 종교 등을 통해 맺어온 다양한 사회관계를 단절시켜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요구해 왔으며, 이는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용되어 왔다.⁷⁷⁾

자가 마련을 통한 주거의 정착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시켜 지속적인 인적 네트워크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고, 전역 후에도 급격한 환경의 변화없이 빠르

76) 최광현, (전게서), p.5.

77) 최광현, (전게서), p.3.

게 사회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성장기 자녀의 안정적인 교육환경의 제공과 교우 관계 유지를 통해 자녀의 성격형성 및 학업 성장, 사회관계 등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4) 군 주거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 부담 감소

자가 보유의 증가는 매년 계속되어오는 군의 주거시설 확보 및 관리에 대한 부담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3~'17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군 관사 개선을 위한 재원은 약 1.2조원이 소요되며, 매년 부족 및 노후교체 물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직업군인들의 자가 보유 증가는 군의 주거시설 지원 소요를 감소시켜 시설의 물량 확보 및 유지 보수를 위해 사용되는 각종 예산의 절감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현재 기혼자 및 독신자 주거시설로 이원화되어 있는 업무 영역은 독신자(별거자) 주거시설 업무분야로 집중시켜 현재보다 효율적인 유지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미국, 일본, 독일, 대만 등 많은 나라들이 직업군인들에게 주거를 지원하는 대신 주택마련을 위한 지원활동을 늘리고 있는 점을 고려시 우리 군도 장기적 관점에서 점차적으로 자가 보유를 증가시켜 나가고, 군에서 직접 운영 및 관리하는 군 관사시설은 축소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4.2.1.3 개선방안

1) 입주보증금의 상향 조정

2013년 국정감사에서 유기준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6월 30일 기준 실(實) 전세자금은 서울(1급지)지역은 2.3억원, 계룡(4,5급지)지역은 1.2억원이었다. 다시말해서 이것은 일반 국민들의 경우 최소 1.2억원의 전세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 국민들은 최초 결혼시부터 주거문제를 중요한 고려요소로 인식 하는데, 통상 그 비용은 부모의 경제적 지원,

저축, 대출 등을 통해 충당하며 이것은 향후 자가 마련을 위한 종잣돈이 된다.

반면, 직업군인들의 경우는 아래 <표 53>과 같이 소정의 입주보증금만 있으면 군에서 지원되는 주거시설을 사용할 수 있어 일반 국민들에 비하여 주택마련에 대한 부담이 적은 편이며, 많은 직업군인들이 입주보증금 이상의 비용을 마련해야하는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급지별 입주보증금의 차이는 낮은 급지에서 높은 급지로 이사할 경우에는 대출을 통해 부족금액을 마련하기도 하지만, 높은 급지에서 낮은 급지로 이사할 경우에는 입주보증금 지불후 잔여 금액을 보존하지 않고 소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표 53> 국민주택 기준(85㎡) 적용시 입주보증금

구 분	일 반			BTL		
	1급지	4, 5급지	차 이	1급지	4, 5급지	차 이
금 액	515만원	155만원	360만원	773만원	206만원	567만원

이러한 현상이 장기간 반복됨에 따라 일반 국민과 직업군인의 경제적 수준 차이는 더 커지게 되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에서 지원되는 주거시설에 대한 직업군인들의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현재 지역별 5개 등급으로 나누어 차등 적용하고 있는 입주보증금의 운영 방법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지역별 차등 적용되고 있는 군인 주거시설의 입주보증금은 지역별 균등하게 일반 국민들의 평균 전세금 수준으로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 물론 초기 입주보증금 마련이 부담이 될 수도 있으나 이 돈은 중장기 근무후 퇴직시 자가마련을 위한 종잣돈이 될 수 있으며, 주거확보가 되지 않아 결혼을 하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긴장감을 공유함으로써 직업군인들의 자산 증식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초기 입주시 입주보증금은 개인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정년 및 계속 근무년수 등을 고려하여 부족금액에 대하여 저리로 지원해 줌으로써 비용 마

련을 위한 개인부담을 감소시키고, 재직기간 동안 매월 일정액을 상환시켜 나가게 함으로써 대출의 부담을 점차 감소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입주보증금의 관리는 전 군을 통합하여 한 개의 별도 기관에서 전담하여 관리하고, 최초 군 주거시설의 입주시부터 최종적으로 퇴거사유 발생시까지 별도의 개인환급 및 징수 없이 계속 운영함으로써 항상 충분한 자금 확보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며, 이는 부족한 입주보증금의 대출 지원과 전세금 지원, 기타 복지예산을 위한 재원확보 등에도 용이하게 활용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2) 군인공제회 내 집마련 지원 개선

군인공제회 주택분양의 문제점은 양질의 주거시설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직업군인이 부담하기에는 비교적 높은 분양가와 적절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군인공제회의 분양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 및 인트라넷을 검색해 보면 구체적인 정보가 나와 있지 않고 있으며, 건설 완료후에도 수년간 ‘분양중’으로 게시되어 있는 자료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분양에 대한 정보가 회원들에게 적절히 제공되어야 하겠으며, 비선호지역에 위치하여 장기간 미분양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회원들에게 과감한 할인혜택과 홍보를 통하여 조기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회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높은 분양가에 대한 해결책으로 낮은 금리의 대출 지원 및 분양가의 적절성 등을 검토함으로써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분양가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건축을 위한 토지 매입 비용일 것이다. 따라서 직업군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의 토지를 저가로 매입하는 방법이 고민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부대통합 및 재배치 계획과 연계하여 전국에 산재해 있는 부대이전이 계획된 군용 부지 및 미사용 부지들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처리되고 있는 이러한 부지를 수의계약을 통해 군인공제회에 보다 저가로 제공함으로써 회원들은 분양금 부담의 감소 혜택을 얻고, 군인공제회 역시 초기 투자비 감소를 통해 이윤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기타 방법으로 장기 미분양 되고 있는 군인공제회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 형태로 지원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

3) 다양한 부동산 정보제공 및 군인가족 경제교육 강화

직업군인의 특성 중 폐쇄된 군대문화는 군 외부의 일반적인 환경변화에 대하여 기민한 반응을 제한시키는 원인이 된다. 내 집을 마련한다는 것은 일반 물품을 구매하는 것과는 달리 대규모의 금전적인 투자를 요구하므로 상당히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직업군인들은 근무환경의 특성상 다양한 부동산 정보가 부족하고 현지 실사를 통한 정확한 상황 판단이 제한되어 주택 구입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군인공제회, 대한주택공사 등의 특별분양 물량이 나오더라도 현장 방문의 어려움 때문에 내부 배치, 방향, 일조, 주변 환경, 교통 등 주거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소들에 대한 확인이 제한되고 있다.

최근 국방부 및 각 군에서는 복지지원 차원에서 부대별로 내 집 마련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자료들이 최신화되지 않아 활용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군인가족들의 경제교육 역시 월 1회 반상회보를 통한 사례전파 또는 연 1~2회 군인가족 보안교육과 연계한 소집교육 등을 통해 실시하고 있으나 실적 위주의 형식적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스마트폰 앱, 인터넷 e-learning 등을 활용하여 실질적이고 현장감 있는 최신 정보가 실시간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별 주민자치단체 및 경제 전문가에 의한 군인가족의 경제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며, 일원화된 민원창구를 통해 각종 궁금증에 대한 전문성있는 상담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직업군인의 자가 보유율 증가를 위해서는 위에서 제기된 것들 외에도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군에서 지원되는 주거 시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며, 군은 직업군인들이 스스로 자가 보유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환경제공 및 적절한 지원활동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4.2.2 군(軍) 지원 주거시설의 최소화

직업군인의 근무지역은 전방 및 해안지역 등 상대적으로 인구 및 주거밀도가 낮은 지역에 다수 분포하고 있으며, 직업군인의 주거시설 역시 근무지역과 동일 또는 근접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은 그동안 직업군인의 주거시설 부족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하여 군에서 다량의 주거시설을 확보하여 지원하도록 하는 배경이 되어왔으나, 최근에는 도로, 통신 및 기타 각종 인프라의 전국적인 구축으로 전·후방의 차이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고, 군의 협소 및 노후 시설을 사용하기 보다는 민영주택을 선호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어, 군은 건설, 매입, BTL 등을 통해 직업군인의 주거시설을 국민주택 수준의 주거환경으로 개선시켜 나가고 있으며, 부족 소요에 대해서는 전세금 지원 등을 통해 해소시켜 나가고 있다.

그러나,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주거시설은 건립, BTL, 민간 매입 등 제공 형태를 불문하고 모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노후에 따른 유지관리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앞에서 제시한 직업군인의 자가 보유율 향상과 더불어 군에서 지원하는 주거시설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작전임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주거지원의 형태를 차별화시킬 필요가 있다. 주거지원의 형태는 전·후방 공히 작전 필수 인원에 대해서는 군에서 직접 주거를 지원함으로써 즉각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주고, 기타 인원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자가 또는 전세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시설의 확보가 제한되는 전·후방의 격오지역에 대해서는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별·축선별로 민간 매입을 통하여 지원함으로써 직업군인의 안정된 주거환경 지원 및 군의 관리 부담을 최소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잦은 근무지 이동이 불가피한 직업군인들의 근무여건을 위하여 군에서 운영하는 기혼간부의 주거시설 지원은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되, 독신 및 기혼 별거간부를 위한 1~2인용 시설은 보다 확충시켜야 하겠다.

4.2.3 주거지원 예산의 현실화

4.2.3.1 전세자금

「군 간부 전세금 대부훈령」에 의해 2001년 250억원의 조성금으로 시작한 군 전세자금은 아래 <표 54>와 같이 매년 증가되어 2013년 기준 국방부에서는 2,992억원의 자금을 조성하여 운영되고 있다.

<표 54> '01~'03년 군 간부 전세금 대부사업 전입금 조성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	2011	2012	2013
전입금	250	442	294	315	...	231	235	227
조성액 (누적)	250	692	986	1,301	...	2,530	2,765	2,992

* 출처 : 2013 국정감사 질의자료(손인춘 의원).

그러나, 현재 지원되고 있는 전세자금은 시중 전세자금과 비교하여 턱없이 부족하며, 부족 금액에 대해서는 개인이 은행 대출 등을 통해 마련하여야 하고, 이는 대출이자의 개인부담을 발생시키고 있어 전세자금의 현실화 요구는 그동안 계속되어왔다.

2013년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손인춘 의원은 1,230억원의 추가예산 확보시 시중 전세자금의 100% 지원이 가능하며 향후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이 불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추가 예산 편성 방안에 대해 국방부에서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최근 장기화되고 있는 부동산 경기의 침체 현상은 전세물량의 월세 전환 및 전세자금의 상승을 부추기고 있어 전세자금의 100% 지원을 위한 소요는 위의 주장과는 달리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방부는 부족한 전세자금의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소요 건의를 해

야 하겠으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현재 및 미래의 예부동산 시장 전망 등이 입체적으로 고려된 정확한 소요 예측이 병행되어질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최근 전세금이 매매가의 80% 이상을 초과하는 깡통주택의 증가로 세입자의 피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시 보다 안정적이고 검증된 전세 시설의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4.2.3.2 주택수당

2013년 국정감사에서 유기준 의원은 군인에게 지급되는 수당 중 10년 이상 장기 동결된 수당에 대한 인상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특히, 군 주거시설 이외의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하사 이상의 군 간부에게 지급되고 있는 주택수당의 경우 1995년 이후 집값 및 전세금의 지속적인 상승에도 불구하고 18년째 8만원으로 동결 지급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국방부는 2010년 기준 군 관사 입주대상의 26% 정도가 주택수당을 받고 있으나, BTL 사업 등이 준공되는 2014년도 이후에는 15%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감소된 재원으로 연차별 인상하여 2017년에는 16만원 수준으로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국정감사시 유기준 의원이 제시한 자료와 은행별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적용시 매월 20만원~34만원의 추가 지출이 발생되고 있는 바 최소 20만원 이상의 수준으로 상향 조정될 필요가 있으며, 미군의 주택수당 지급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별 부동산 가격의 시세 차이에 따라 차등화 지급을 하는 것도 적용시켜 볼 만하다.

4.2.3.3 가족 별거수당

직업군인의 상당수가 근무지의 잦은 이동, 자녀 교육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부득이하게 떨어져 지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 많은 연구자들은 가족 별거수당의 신설을 통해 별거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추가 비용을 만회할 것을 주장하지만 제한된 국방예산으로 이러한 요구를 100% 충

족시킬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별거수당은 별거의 원인과 군 주거시설의 사용여부 등을 고려하여 차별화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예를들어 근무지역내 군 관사 지원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교육, 직장 등 개인적인 이유로 동반이사를 희망하지 않아 발생하는 별거의 경우에는 아래 <표 55>와 같이 군관사 지원 제한으로 떨어져 지내는 대상과 비교하여 일정 수준 감액된 수준으로 지급하고, 별거기간 중 소요되는 생활비 역시 독신숙소의 제공 가능 여부에 따라 차별화시킬 필요가 있다.

<표 55> 별거 원인에 의한 수당 지급 차별화 적용(안)

구 분		군 관사 지원 여부	
		가 능 (본인의지)	불가능 (불가항력)
독 신 숙 소 지 원	가 능	• 교통비 지급 • 독신숙소 관리비 징수	• 교통비 지급 • 별거수당 지급(독신숙소 관리비 공제)
	제 한	• 교통비 지급	• 교통비 지급 • 별거수당 지급

위와 같은 조치를 통해 군의 지원 제한으로 발생하는 별거 간부의 경제적 불이익을 어느정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개인적 이유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별거자에게는 최소한의 교통비 지원을 통해 불만족을 해소시킬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별거수당의 규모는 가용예산의 범위내에서 적정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하겠으나, 외국군의 사례를 고려할 시 최소 월 2회 정도의 교통비가 실비로 반영되고 별거기간 중 숙박시설에 대한 적정 수준의 비용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4.2.3.4 이사 화물비

과거에 비하여 이사 화물비의 지원은 많이 인상되었으나, BTL 및 민간매입

아파트의 증가와 더불어 고층으로의 이사 소요가 증가하였고, 물가 및 인건비의 인상, 이사 화물 증가에 따른 이사 차량 및 고층 사다리차 소요의 증가 등 다양한 원인 발생으로 인해 실제 이사화물비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사 화물비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군인가족의 생활 환경 수준에 대한 실태 진단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시중 이사비용의 실시간 추적관리를 통해 적정 수준의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전 예측 및 소요 건의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4.3 주거환경 및 교육 측면

4.3.1 주거시설의 대단지화

4.3.1.1 고층화 및 주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환경 조성

대규모 집단 주거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넓은 부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반 사회에 비하여 군이 가진 큰 잇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TL 또는 건립의 형태로 확보된 많은 군 관사 시설은 5층 미만의 저층 및 다수의 건물로 건설되어,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표 56〉 군인 주거시설(APT) 건설 사례

구 분	지하 (층)	지상 (층)	동수 (동)	세대수 (세대)	사업비 (원)	대지 (㎡)	건축면적 (㎡)
A(해군)	1	15	7	345	995억	24,647	3,674
B(육군)	PIT층	4	6	112	915억	21,055	3,839

* 참고 : 국방부. (2009). '09 국방시설 Design Collection, pp.124~189.

위 〈표 56〉은 읍·면 단위 이하의 유사 지역 및 유사 규모의 사업비가 투자된 두 APT의 사례를 제시하였는데, 고층형 A가 저층형 B보다 3배 더 많은

세대수를 수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별 차이가 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건물의 수가 많아질수록 기초공사에 사용되는 비용의 비중이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B와 같이 넓은 부지에 다수의 저층형 아파트가 폭넓게 분산된 경우 시설별 보수관리 및 넓은 지상공간에 대한 환경관리 등 추가적인 관리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으며, 낮은 주거밀도는 군 주거단지 주변에 민간 편의시설의 조성을 제한시켜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건립시에는 가능한 고층형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가능한 많은 세대수가 밀집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부지는 임대, 매매 등의 방식을 통하여 학원, 상점, 헬쓰장, 식당 등 다양한 민간 상권의 단지 주변 유입을 유도함으로써 군 주거단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지역 상권이 형성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4.3.1.2 지하 주차장의 확보

군 주거시설이 밀집해 있는 전방 및 해안지역은 눈·비·해수·염분 등의 자연적 원인과 수많은 장비기동 혼란으로 발생하는 먼지로 인해 차량 등 장비의 유지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비교적 북한과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화력 및 생화학 위협에 대한 대피공간의 필요성이 높다.

전방 지역의 대피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을 고려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의 확보는 제한적이거나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제공하는 훌륭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일반적인 민간의 고층아파트 단지는 대부분 지하 주차장이 설치되어 주차공간의 부족현상을 해소시키고 있고, 각 건물과 지하의 연결통로를 조성하여 비·눈 등 기상에 고려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상을 공원화하거나 주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도 한다.

따라서, 향후 군인 집단 주거시설(APT)의 조성시에는 거주민의 동선과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위에서 제기된 요건들이 최대한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하고, 지하주차장 내 발생 가능한 각종 범죄 방지를 위한 방범카메라 설치 등

주민보호 대책이 함께 강구될 필요가 있다.

4.3.1.3 주거시설 면적의 소형화

2013년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등 사회·환경적 변화에 따라 4인 표준가구가 감소하였고, 2012년 기준 자녀 없이 성인 2명으로만 구성된 가구가 27.9%를 차지한다고 보고하였으며,⁷⁸⁾ 통계청은 2035년이 되면 87.7%가 3인 이하의 가구가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⁷⁹⁾

이를 고려시 군 역시 향후 위의 통계치와 유사한 3인 이하의 가구가 주를 이룰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도 자녀의 대학교 입학시기 이후부터는 부부만 거주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점을 고려시 80~85m² 면적의 주거시설만으로도 생활의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개인별 독립된 공간보장을 원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됨에 따라, 군 역시 전·후방 공히 국민주택 규모(85m² 이상) 이상의 넓은 면적으로 주거시설을 개선시켜 나가고 있는 실정이나, 미래 인구 변화 추세를 고려시 공급면적의 적절성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넓은 면적의 아파트는 매입을 위한 비용도 높지만, 난방비, 관리비 등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도 높아 입주자에게는 부담이 되기도 하며, 노후 시설에 대해서는 매각을 통해 처리하여야 하나 사회적 분위기는 넓은 면적의 아파트 구입을 선호하지 않아 향후 매각 처분시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제대로 발휘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군 주거시설의 확보시에는 미래의 정확한 소요 예측과 자산의 가치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대한 다수의 세대가 주거지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넓은 면적 보다는 80~85m² 수준의 비교적 소형 APT 위주로 보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중 일부는 손님 방문 등 유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Guest-House로 운용하여 편의를 제공한다면 공간 부족에 대한 불만족을 크게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78) 연합뉴스(2013. 11. 21), “자녀 없이 성인 2~3명만으로 구성된 가구 급증”.

79) 2035년 가구원수별 추계가구 : 1인(34.3%), 2인(34%), 3인(19.4%), 4인 이상(12.2%)

4.3.2 사용자 중심의 구조 개선

4.3.2.1 설계변경을 통한 공간 활용도 개선

필자는 잦은 이사를 통해 ‘나만의 공간’이 보장되는 주거시설에서 지내고 싶다는 욕구를 강하게 느껴왔다. 사실 군에서 제공되는 아파트의 경우 거실을 중심으로 방이 2~3개 구비되어 있기는 하나 침실을 제외한 방은 책상 하나 두기에도 비좁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창고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군 표준 설계도에 의한 아파트는 전·후 베란다의 공간이 필요 이상으로 넓게 배치되었으나 활용도가 낮은 편이다.

따라서, 과거에 비하여 월등히 늘어난 물동량과 학습 및 자녀방 등의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거시설 구조의 획기적인 설계변경을 통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베란다의 일부를 축소시켜 거실 및 학습방의 면적을 확대시키고, 수납공간은 아래 <표 57>과 같이 각 방의 용도별로 차별화를 두어 적용함으로써 공간활용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표 57> 수납공간 설치(안)

구 분	큰 방	자녀방	학습방	거 실
설 치 형 태	• 붙박이형 이불장 • 붙박이형 옷장	• 붙박이형 옷장 • 레일형 책꽂이	• 상단 수납장	• 거실장 비치 (수납공간)
비 고	공간 확대	이중 설치	베란다 확장	

특히,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도서의 물량이 상당한 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시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레일형 책꽂이를 활용함으로써 제한된 공간을 이중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베란다 공간의 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는 확장된 거실 및 학습방에 대한 보온대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이중 단열보온창의 설치 등을 통해 충분히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 부피가 큰 대형냉장고, 김치냉

장고, 에어컨 등의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가전기기의 설치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군 표준설계가 개선되어야 하겠다.

4.3.2.2 Built-In식 설계

잦은 이사를 통해 겪는 애로사항 중 불일정한 주거시설의 면적은 직업군인 및 가족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하지 못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 특히 평균 2년 주기로 이사를 해야 하는 많은 장교들의 경우, 새로 이동하게 되는 지역의 군 관사가 기존보다 좁아질 경우 가구를 버리거나 이웃에게 양도하는 사례가 많으며, 이사회 임시보관 형태로 관리함으로써 주거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Built-In 형태의 구조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물동량을 최소화 시킴으로써 거주자의 생활환경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Built-In의 형태로 구비될 대상으로는 옷장, 식탁, 거실장, 싱크대, 전기레인지, 전기오븐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부대에서 비데, 미니 냉장고 등을 설치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위생적 불안감과 활용도 면에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많은 점을 고려시 Built-In의 설치시에는 주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설치된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잦은 이사를 통해 노후의 진행도가 빨라질 수 있으므로 입주·퇴거간 이상유무에 대한 분명한 확인점검과 주기적인 보수, 교체 등을 통해 최상의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4.3.3 자녀 교육 환경 개선

4.3.3.1 영유아 자녀 교육여건 제공

잦은 이사를 하면서 영유아 자녀를 둔 많은 군인가족들은 자녀의 교육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며 지내고 있다. 특히, 보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뿐만 아니라, 최근 부쩍 늘어난 어린이집 내에서의 유아 폭행, 가혹행위 등은

부모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어 보다 안전한 보육시설의 요구가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면에서 군 주거시설 내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 및 국·공립 어린이집은 군인가족들에게 경제적, 심리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해소시켜 주는 방편이 되고 있으나, 실제 소요와 대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직장어린이집의 점진적 확충을 위하여 관련 예산을 중장기 계획에 지속적으로 반영시킬 필요가 있으며,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의 경우 직업 군인의 잦은 근무지 이동을 고려하여 입학 정원이 초과되더라도 언제든지 입학이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두는 등의 대책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관련 정부부처와의 법률적 조정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4.3.3.2 공동시설을 활용한 교육환경 제공

앞서 향후 인구변화를 고려하여 넓은 면적의 시설보다는 소형화시킬 필요성을 대안으로 제기 하였는데, 이는 환경적으로 가정 내에서 자녀의 교육환경을 제한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발생시킬 수 있다.

1) 독서실 및 학습방 운영

따라서 향후 건설되는 군 주거시설은 주민 공동시설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최근 설치되고 있는 민영 아파트들의 경우 단지내에 독서실, 작은 도서관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지역 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이동도서관 운영 등을 통해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사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군인 주거단지 내에 설치되는 독서실은 자녀 뿐만 아니라 자기계발을 기대하는 많은 직업군인 및 가족들에게 훌륭한 학습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며, 자녀의 학업에 관심이 높은 많은 부모들의 재능나눔을 통해 자율적인 방과후 학습교장 및 취미개발 등 창의적이고 다양한 나눔의 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2) 작은 도서관 운영

‘작은 도서관’의 설치 운영은 영유아 자녀를 둔 많은 군인가족들에게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영유아 자녀를 둔 대부분의 가정은 자녀의 도서구입을 위해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고가(高價)의 도서 구매로 갖는 부담감이 높으며, 물량 역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매 이사시마다 이사화물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면에서 군 주거시설 내에 작은 도서관을 운용하여, 주민자치단체에 의해 운용하게 하고, 주기적인 신간 도서의 공동구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동 도서관 지원 등을 통해 다양한 최신도서가 지원된다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뿐만 아니라 주민교류의 활성화, 이사화물의 감소 등 여러 가지 잇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4.4 주거시설의 관리 측면

4.4.1 군(軍) 관사 배정기준 조정

앞서 군 관사의 배정기준이 부대별 상이하고, 가족의 구성원 수(數) 보다는 계급에 우선하여 배정하고 있는 문제점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상위 계급일수록 자녀의 독립, 자가 확보의 증가로 오히려 넓은 면적의 주거시설이 불필요한 대상이 많은 반면에, 다수의 부양가족을 둔 많은 하위 계층은 좁은 면적으로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다. 특히 성장기 이성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자녀의 성별 차이에 따른 독립된 공간을 제공하지 못하는 등 상당한 불편을 감수하며 지내고 있다.

따라서, 군 관사의 배정시 계급에 기초하여 건물면적의 차별을 두는 방법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부양가족의 수, 이성자녀의 수 등 실질적인 소요를 고려하여 배정될 수 있도록 배정기준이 재정립 되어야 하겠다.

4.4.2 군(軍) 관사 관리 시스템 개선

4.4.2.1 군 관사 관리업무의 재분장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부대별 예규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군 관사 운영체계는 근무지 이동에 따른 군 관사의 원활한 제공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부대별로 시설 및 예산관리를 직접함으로써 복지담당관의 업무부담 증가, 비편제 병력 운용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군 관사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군 관사 관리업무의 재분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국방부 또는 각군 본부에서는 입주보증금의 징수 및 관리, 전세자금 대부업무, 민간 아파트의 매입 및 매각 등의 업무를 전담하여 예하부대의 관리 부담을 감소시키고, 사단 또는 연대 단위로 통합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군 관사 관리 부대는 입·퇴거의 1차적 확인·통제, 관리비를 이용한 소규모 보수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4.4.2.2 입주자 관리 프로그램 개선

현재의 군 관사 입주자 관리는 국방부 인트라넷망을 이용하여 입주 및 퇴거를 추적 관리하고 있으나, 해 부대에서 실시간 추적 관리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하기는 제한이 있다.

특히, 최근 군 관사의 위탁관리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시 군 실무자의 관심은 더욱 소홀해질 개연성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확인 및 통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인트라넷을 이용한 군 관사 관리 시스템은 실시간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개선이 요구되는데, 이런 면에서 전국적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전국 영내·외 마트의 자산과 판매현황, 재고 등을 실시간 확인·통제하고 있는 국군복지단의 「보급·판매 시스템」은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와는 달리 전국적으로 인터넷망이 구축되어 있고, 외부로부터의 접근제한 등 보안관련 부분은 「보급·판매 시스템」의 보안기능과 관리자 권한 등을 통하여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적용은 예하 말단 제대의 군 관사까지 실시간 비정상 사용여부를 확인 가능하게 하고, 제대별 권한 부여 및 감찰(감사) 부서를 이용하여 통제가 가능할 것이다.

4.4.3 주거복지 만족도 진단 방법 개선 및 전문 감사 인력의 확보

4.4.3.1 주거복지 만족도 진단 방법 개선

군인의 주거복지 실태는 주기적으로 심층 분석되어질 필요가 있으나, 이에 대한 실시간 분석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직업군인들의 주거복지에 대해서는 일부 국방부의 지원하에 군사회복지학회 및 개인 연구가들에 의한 연구자료가 있기는 하나, 대부분의 연구자료들이 2008년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2008 군인복지실태조사」를 참고하고 있고, 내용 면에서도 대동소이하여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은 「군인복지기본법」의 제6조 ‘군인복지기본계획의 수립·시행’규정에 5년 주기로 군인복지실태조사를 하도록 명시된 영향이 크다. 법률적 근거에 기초했을 때는 「2008년 군인복지실태조사」결과만을 참고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으나, 사회·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직업군인들의 복지실태 조사 주기는 2~3년 주기로 증가되어 시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전문기관의 운영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직업군인의 주거복지 실태를 진단·분석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추가 설치 운영하는 방안도 있겠으나, 여기에서는 현재의 가용 능력 범위 내에서 최소의 능력 보강을 하는 쪽으로 개선할 것을 제시한다.

즉, 주거복지 실태에 대한 총괄적 관리는 국방부 인사복지실에서 하되, 직업군인들의 주거복지 실태 분석을 위한 최소의 인원을 충원하여, 인터넷 설문을 통해 실시간 입주자들의 복지실태를 분석하고 자동으로 자료를 제공하게

한다면 환경변화와 거주자 요구를 가변성있게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게 되어 향후 복지정책을 추진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가정별 인터넷 보급률이 거의 100%에 육박하는 현재의 환경을 고려시 이 방법은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인터넷 설문을 통해 계급, 출신, 지역, 학력, 소득, 저축, 자녀수, 불편요소, 선호도 등 다양한 분석을 간편하게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시간 및 비용의 절감 효과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4.4.3.2. 전문 감사인력의 확보

현재의 군 관사의 관리는 위탁관리 형태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다. 분평단 분석결과에 의하면 위탁관리를 위한 적정 운영규모는 450세대 이상이 바람직하지만 군 관사의 건립연도와 면적 등을 고려할 때 200~300세대 단위로 위탁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⁸⁰⁾

또한 군 관사에서 운영되는 자금의 규모도 과거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였고, 최근 민영 아파트의 관리비 횡령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지능화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시 이러한 제반 현상들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감사요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현재는 부대별 인사실무자 또는 자체 감찰장교 등을 활용하여 수시 진단하고 있으나, 전문성의 부족으로 사실상 깊이있는 진단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더욱이 민간 위탁의 증가로 진단의 접근범위가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전문 감사인력은 부동산 법률, 자금관리, 전산능력 등 제반 분야에 걸쳐 폭넓은 전문지식을 보유한 자를 확보하여야 하겠고, 전국에 산재된 군 직영 및 위탁관리되고 있는 모든 주거시설에 대해 주기적인 진단활동을 통해 투명성을 보장해야 하겠다.

80) 육군. (2013a), 전제서, p.22.

* 위탁관리 적정 운영규모(분평단 분석결과) : 450세대 이상이 바람직하나, 군 관사의 건립연도, 평수 등을 고려 200~300세대 단위로 위탁관리 가능.

V. 결 론

군(軍)이 존재하는 목적은 평시 전쟁에 대비하고, 유사시 적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주권, 국토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하여 군은 평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엄격한 명령과 규범체계 하에서 철저히 절제된 생활을 강요받으며 지내고 있다. 이러한 군의 헌신적인 노력과 생활 모습들에 대해서 평시 국민들의 인식은 다소 미흡한 편이지만, 지난 6.25 전쟁이후 끊임없이 계속 이어온 북한의 침략적 행위에 맞서 피흘린 수많은 군의 희생과 헌신적 노력들은 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가를 성장하게 만든 원동력이 되어왔다.

선진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군의 중요성을 공감하여 사회지도층들이 군 복무 경험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군인의 복지에 대해서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생활 저변에 깔려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동안 수많은 희생과 봉사에도 불구하고, 직업군인들에 대한 복지 지원에 대해 적극적이지 못하였으며, 이는 직업군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군인가족들의 불만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어 왔다. 다행히 지난 2007년 「군인복지기본법」 제정 이후 군(軍)의 복지 개선에 대한 많은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최근 급격한 안보환경의 변화는 국방비를 방위력 증강 위주로 사용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어, 복지 개선을 위한 많은 사업들의 정상적인 추진을 제한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한적인 환경 하에서 직업군인의 복지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찾아보고자 하였으며, 그 중 직업군인들의 주거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실태 분석과 함께 아래와 같이 ‘주거지원 방법 및 예산’, ‘주거환경 및 교육’, ‘주거시설의 관리’ 등 3가지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주거지원 방법 및 예산 측면에서는, 현재 무상 제공되고 있는 ‘군 관사 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하여 ‘직업군인 자가(自家) 보유율의 증가’, ‘군(軍) 지원 주거시설의 최소화’, ‘주거지원 예산의 현실화’ 등을 제시하였다.

현재의 군 관사 지원은 직업군인들의 자가(自家) 보유에 대한 의지를 희석시키고 있어, 전체 국민의 자가 보유율 53.8%에 비하여 턱없이 낮은 24.7%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이것은 물가의 상승과 더불어 직업군인들의 자가 보유 가능성을 더 힘들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직업군인들의 군 관사 시설에 대한 높은 의존성은 향후 지속적인 군 관사의 확보 및 노후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부담을 강요한다.

따라서 군 관사 입주보증금의 상향조정, 목돈 마련을 위한 금융 서비스 지원, 군인공제회 분양혜택 개선, 다양한 부동산 정보 및 경제교육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직업군인들의 군 주거시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가 보유율 향상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고, 군 관사 운영량의 점진적 감축을 통해 시설 관리 및 유지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으며, 전세자금, 주택수당 등 주거지원 관련 예산이 적정 수준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 소요의 정확한 예측과 지속적인 건의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둘째, 주거환경 및 교육 측면에서는, ‘주거시설의 대단지화’, ‘사용자 중심의 구조 개선’, ‘자녀 교육 환경 개선’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집단 주거시설을 구성할 경우에는 거주민의 생활 편의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넓은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고층화하고, 주변의 일부 부지는 임대, 매각 등을 통해 학원, 상점 등 민간 편의시설을 적극 확보하며, 지하주차장의 설치를 통해 거주민의 편의제공 및 대피공간을 확보하는 등 주민편의 및 생존성 보장을 위한 조치가 함께 강구되어야 하겠다.

또한 향후 미래인구변화의 추이와 일반국민들의 주택 선호도 등을 고려시 현재 넓은 면적 위주로 매입, 건설되고 있는 주거시설들은 향후 유지관리 및 매각 등을 고려시 소형 위주로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베란다 확장, 수납공간 설치, 대형 가전제품 설치 공간 확보 등을 통해 공간활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하겠고, 자녀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의 정원 외 입학 조건 완화, 독서실 및 작은 도서관의 설치 등 다각적인 개선노력을 진행시킴으로써 직업군인 및 가족들이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거시설의 관리 측면에서는, 현재 부대별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 군 관사의 배정기준을 정립시키고, 군 관사 관리업무의 재분장을 통해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전국적 인터넷망을 이용한 실시간 입·퇴거자의 추

적 관리 시스템 구축, 설문 프로그램을 통한 실시간 주거복지 실태 종합 및 전문 감사인력의 확보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필자는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우리 군의 복지수준이 미흡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물론 우리의 복지수준이 기대치를 만족시킬 만큼 충분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의 우리 군의 개선노력과 추진 성과들이 부각되지 못하고 문제점만 강조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앞의 외국군 복지 사례를 통해서 확인하였듯이, 국가의 경제수준은 나라별 복지 정책의 수준 차이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 우리의 경제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선진국가의 복지수준을 요구한다면, 최근 그리스와 미국의 복지정책 과오 사례가 우리에게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직업군인의 주거복지 정책은 직업군인의 주거안정을 보장함으로써 사기를 양양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군이 지금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현재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폐쇄된 군대조직 속에서 장기간 근무후 사회로 진출했을 때 변화된 환경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과, 현재 군이 가지고 있는 자산(군관사)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라는 문제일 것이다.

따라서, 향후 직업군인의 주거복지정책은 「제2차 군인복지기본계획」의 정상적인 추진과 더불어, 직업군인의 자가 보유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 및 군관사의 점진적 축소 형태로 추진되어야 하겠으며, 앞에서 제시된 개선방안들이 타당성 검토를 거쳐 적용되어진다면 직업군인 및 가족들의 만족도 향상과 군의 경영효율성 측면에서 높은 성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국방부. (2013a). 2013년 국정감사자료.
- 국방부. (2013b). 2013 국방통계연보.
- 국방부. (2013c). 군 어린이집 설치운영 개선 방안 토의자료.
- 국방부. (2012a). 국방개혁 기본계획(12 ~ 30).
- 국방부. (2012b). 2012 국방백서.
- 국방부. (2012c). 국방부훈령 제1899호 이사화물수송임 지급훈령.
- 국방부. (2012d). '13~'17 국방중기계획 시설분야 정책회의록.
- 국방부. (2011). 제2차 군인복지기본계획 작성방향 연구:한국군사회복지학회.
- 국방부. (2009a). 국방기본정책서(2009~20025) 부록#11 군인복지기본정책서.
- 국방부. (2009b). 군 복지현황 분석.
- 국방부. (2009c). '09 국방시설 Design Collection.
- 국방부. (2008). 2008 군인복지실태조사.
- 국방부근무지원단. (2013). 예규 1-2-4.
- 국토교통부. (2012. 5. 13). 정부의 2012년도 주거실태 조사 결과
- 김민수. (2012). 후방지역 군인복지 주거단위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 홍익대.
- 김병찬·정일환. (2010). 주요 국가의 직업군인을 위한 교육·복지제도 비교 분석 연구. 「비교 교육 연구」, 20(4).
- 김승조. (2013). 직업군인 주거복지 현황과 개선방안. 원광대학교.
- 남원석. (2007). 주거복지의 개념과 저소득세대의 주거문화에 대한 적용. 주택도시연구원.
- 문채봉·최광현. (2012). 군 가족의 별거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전략:미군군 선행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주간국방논단」. 제1428호.

- 민덕기. (2007). 직업군인 주택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 박인규. (2012). 군인아파트 거주자의 주거만족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 배영구. (2010). 군인 주거복지 제도 개선방안 연구. 조선대학교.
- 손병렬. (2012). 군인의 주거 안정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 양명숙·이규서. (2003). 청소년기 군인자녀의 환경적 특성이 인생태도와 자아 개념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학회지」. 12(4):450
- 육군본부. (2013a). 모범적인 군 주거문화 조성, 「인사보」, 127:22-23
- 육군본부. (2013b). 육군예산
- 육군본부. (2012). 육군규정 121 복지업무규정.
- 이성률. (2012). 직업군인의 군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건양대학교.
- 이종하. (2012). 군인 주거시설 거주만족도 핵심요인 도출에 관한 연구:고양시, 파주시, 포천시 지역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 이주택. (1994). 주거환경 만족도 요인구조 분석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 이주원. (2012). 주거복지, 복지에서 권리로:다른 권리의 실현기반으로서의 주거. 「복지동향」. 1:28-31.
- 이창석. (2003). 『부동산학개론』. 서울:형설출판사. 82-83
- 장선정. (2013). 일반인에 대비한 군인의 주거만족도 결정요인 차별성에 관한 연구:고양, 파주, 포천지역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 장지환. (2009). 직업군인의 주거지원 정책에 관한 개선 방안 연구:육군 주거 정책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 정현숙·정선영. (2012). 육군의 배우자가 인지한 군인배우자의 군인직업 특성, 가족환경 특성과 복지요구도. 「한국군사회복지학」. 5(1):122-134.
- 최광현. (2012). 군인의 잦은 부대이동이 가족들에게 미치는 영향:미군의 선행연구 사례와 한국군에 대한 시사점, 「주간국방논단」. 제1405호.
- 현대경제연구원. (2013). 20~30세대의 결혼관과 초식남·육식녀. 「월간 경제산

업 동향보고」.

현대경제연구원. (2012). 2012년 현재 누가 가장 행복한가?. 「월간 경제·산업 동향보고」.

홍성범. (2010). 군인관사 주거만족도에 대한 연구. 세종대학교.

2. 인터넷 / 인트라넷

군인공제회 홈페이지(<http://www.mmaa.or.kr>)

Daum 홈페이지(<http://daum.net>)

Naver 지식백과(<http://terms.naver.com>)

Naver 뉴스스탠드(<http://newsstand.naver.com>)

미국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ilitarypay.defense.gov>)

육군 인트라넷 홈페이지(사단, 대한민국 현행법령)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http://www.kfb.or.kr>)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

ABSTRACT

The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occupational military personal housing welfare and improvement suggestions

Choi, Dong-Kee
Dept. of Management
for National Defense
Graduate School of
National Defense Science,
Hansung University

This paper analyzes housing welfare of occupational military people those who are executing important missions to protect the ROK amid of continuous nK military threats. This evaluation leads to provide ways to solve critical problems of welfare of occupational military people.

In this study, to make it more realistic, I have studied aspects of occupational military people's "Culture", "Environment", "Morale and Social welfare". Not only that, I have extended my study range, including his spouse and children as housing welfare benefiter in order to fully understand its effect.

And through conceptual investigation about housing welfare and resident satisfaction, I have fully recognized that it is necessary to reflect concept of human rights beyond simple concept of social welfare. Additionally, I have confirmed that to enhance resident satisfaction, multiple variables such as social, economical, and cultural issues must not be neglected.

Considering a fact of occupational military people's uniqueness, about 29.5% of soldier tend to work in the area smaller than "Myun"(county) and 23.5% of soldier are employed in poor working environment. On top

of this matter, frequent moving, isolation, economic burden, and children's educational problems are crucial factors that many people tend not to prefer occupational military people as their vocation.

To alleviate problems that come from the housing welfare, sincere efforts have been put in and as a result, in 2007, "Military welfare basic law" was amended to support the law. Based on "Military welfare basic law",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established "Military welfare basic plan" in order to strengthen their efforts. Those efforts were very fruitful in certain area, however, there are much more rooms should to be filled.

Unfortunately, nK is escalating level of military threats such as conducting nuclear bomb test, missile launch, publicly announce their new weapon systems, and defaming the ROK government. This situation is forcing the ROK government to spend their military budget on weapons for national defense rather than spending on housing welfare.

Therefore, to effectively solve various housing welfare policy, I suggest 3 solutions of "Housing support method and its budget", "Housing environment and Education", and "Management of living place."

First, in a perspective of "Housing support method and its budget", I believe current military policy, policy that gives billets to occupational military people, is reducing the commitment for occupational military people to purchase their own house. Also, considering change of demography in future and burden of managing military facility, I recommend to change the policy in such a way that increase own house ratio and reasonably spend housing welfare budget realistically.

Second, in a perspective of "Housing environment and Education", I recommend to install a large scale of housing complex nearby civilian residential area. Additionally, I strongly suggest to allow customization of living facility in accordance with mission, number of family, gender of his children, and physical change. To minimize the negative effects that posed by frequent moving, I propose to improve educational environment for

his children.

Thirdly, in a perspective of "Management of living place", I recommend to educate experts who are monitoring and analyzing military welfare status in regular base by using internet billet system. In order to use that internet billet, there is no doubt that internet billet system must be improved.

In conclusion, if all those improvement suggestions are executed, opportunity of purchasing own house, and various of welfare benefits will come true in reality. These benefits help soldiers be more proud of their profession and decrease uncertainty of having own house in near future. At the end, we can expect occupational military people ready to execute their missions and sorely focus to defending the ROK.

Key word : Housing welfare, occupational military people, Resident satisfaction, housing support, billet